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 ▶ 일시 : 2016년 4월 23일 (토), 14:00~18:30
-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224A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6년 4월 23일 (토), 14:00~18:30
- ▶ 장소 : 고려대 인암캠퍼스 문과대학 224A호

제1부 학술대회 |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14:00-17: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14:10-14:40	주제발표 1 기조발제	▶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의 요청 : 공공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 발표 : 조철민 (한일장신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2 대학원 세션	▶ 격변기 지식인의 삶과 그에 관한 기억담론 : 민영환과 <혈죽시>에 대한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 발표 : 유요문 (고려대 대학원)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정장순 (고려대 대학원)
15:20-15:30	휴 식	
15:30-16:00	자유발표	▶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 발표 : 장희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박보영 (극동대)
16:0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7:00-18:00]

- 진행 : 국문편집이사 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박보영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제3부 임시총회 [18:00-18:30]

- 의장 : 회장 소인호
- 사회 :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1. 성원보고_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2. 임시총회 개회선언_ 회장 소인호

3. 학회장 인사_ 회장 소인호

4. 안건 심의 및 의결_ 회장 소인호

- 제1호 안건 : 임원(2016~2017년) 변경 및 승인
- 제2호 안건 : 회칙 개정
- 제3호 안건 : 연구윤리규정 개정
- 제4호 안건 : 기타

5. 기타 안건 토의_ 회장 소인호

6. 폐회선언_ 회장 소인호

[목 차]

2016년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 주제발표 1 : 기초발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의 요청 : 공공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7

▶ 조철민 (한일장신대학교)

■ 주제발표 2 : 대학원 세션

격변기 지식인의 삶과 그에 관한 기억담론 : 민영환과 <혈죽시>에 대한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21

▶ 유요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자유발표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49

▶ 장희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79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80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81

주제발표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주제발표 01] 기초발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의 요청 : 공공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 조철민(한일장신대학교)

[주제발표 02] 대학원 세션

격변기 지식인의 삶과 그에 관한 기억담론 : 민영환과 <혈죽시>에 대한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 유요문(고려대학교 대학원)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의 요청 : 공공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철민*

I. 서 언

이 글은 어떤 분석이나 주장보다는, 필자가 애정을 가진 연구주제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는 에세이의 성격을 띤다. 필자가 지닌 연구주제는 시민사회나 그 주요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의 성격은 실천적인 것이다. 즉 지적 희열을 선물하는 고담준론 보다는 지식을 통해 현실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이 현실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현장을 '위한' 지식이다. 시민사회나 시민사회단체라는 현장에 관한 연구가 활력을 잃긴 했지만, 그간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제출됐다. 그런데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현장에 '관한' 연구들이다. 현장에 '관한' 지식은 현장을 대상으로 놓고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지식들이 갖는 효용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 지금 목마른 것은 현장을 '위한' 지식이다.

시민사회(단체) 현장을 위한 지식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지향이나 신념을 담론적 힘을 키워줄 지식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담론과 실천, 두 가지 열쇠말은 최근 시민사회 현장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주제들이라 여겨진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 이라고 했던 것처럼, 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있어서 담론은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의미와 언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왜 이 활동을 하며,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들은 어떤 위치와 역할을 점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들이다. 최근 시민사회현장에서 요청되는 담론은 공

*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연구소 연구교수. chochulmin@gmail.com

익활동¹⁾ 주체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과 공공재정의 활용,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적절하고 유용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닌 논리나 비합리적인 편견에 기반한 담론이 작동하고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는 것은 공익활동의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실천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공익활동 어떻게 잘 펼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 즉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활동의 전략이나 전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절차, 노하우 등이 포함된다. 가만 생각해보면 국가(정부)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 시장(기업)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은 많은데 반해, 시민사회(단체)의 주체들을 위한 그것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공공성을 띠는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주체들에게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과 학습기회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시민사회 주체들이 어떠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처방은 많으나, 실제 문제를 극복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적절한 방법론에 대한 지식은 현장의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담론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제인 ‘공공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II. 담론 : 공공성

시민사회에는 적극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운동, 시민운동을 비롯해,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원봉사,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 주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이 겪는 한 가지 공통된 어려움은 활동을 위한 자원의 부족, 특히 재정문제다.²⁾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원과

1)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거나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민사회 현장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과 같이 좀 더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너무 큰 편차를 보인다. 때로는 매우 급진적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다가도, 어떤 때는 급진적—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형태를 제외한 활동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 이론적으로 볼 때 분명 사회운동인데, 정작 해당 운동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은 운동이 아니라고 하거나, 운동이라 불리기를 꺼려한다.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연원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정부나 시장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추구를 넘어서는 공공성을 띤 활동을 의미한다.

2) 물론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유총연맹 등 개별 법령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화된

전문성 등에 있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가 실시한 각국의 시민사회 건강성 비교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발휘하는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에 비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 선진국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공적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의 역사도 길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세금, 즉 공공재정 지원에 의문을 품거나 비판하는 반론도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반론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가 “왜 국가가 자율적 영역인 시민사회를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이고, 둘째가 “공공재정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는 좀 더 ‘온건한 비판’ 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사회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를 위한 공공재정의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 에 대한 대응해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담론은 이른바 ‘시장실패론’ (market failure)과 ‘정부실패론’ (government failure)이다. 정부가 지닌 부패와 무능, 후자가 지닌 이윤 극대화 기제로 인해 이른바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에 결함이 생기며, 이를 보완할 영역 및 주체로 시민사회를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논리는 결함의 보완을 넘어, 특정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나 시장 보다 시민사회가 더 잘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공공재이론’, ‘초과수요이론’, ‘계약실패이론’ 등의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정부·시장과 시민사회는 잘 하는 일이 다르고,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은 각기 그것을 잘하는 주체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온건한 비판’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이상 정부가 지닌 선호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시민사회가 지닌 기본적인 기능인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무뎌지며, 심지어 정부에 ‘예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지원에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본연의 목적에 따른 활동 보다는 재정지원을 받기 쉬운 활동을 채택하거나, 재정지원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몰두하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지원관행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부나 회원활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마련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이를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라 부른다. 이에 대한 주된 반론은 ‘시민사회 자금자족의 신화’ (myth

이른바 국민운동단체나 대형 모금단체들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이러한 소수의 단체들과 대다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공존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of civil society self-sufficiency)와 ‘독립성의 신화’ (myth of lone ranger)로 개념화 된다. 즉 현실적으로 서유럽과 북미국가 등에서, NGO들의 지배적인 수입원은 회원회비와 서비스 요금, 혹은 사적기부—개인기부, 기업기부, 재단기부—등이 아니라 공공재정의 지원이다. 그리고 그 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사회는 자원을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동원해야 한다는 ‘신화’와 같은 담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영역의 주체들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은 쉽게 정당화 되는데—이를 테면 중소기업 지원 등—왜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사회 주체들에 대한 지원은 정당화되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제기된다.

모든 담론은—그것이 담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일정한 객관성을 지녀야 하지만, 또한 그것은 특정 관점을 내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두 갈래의 반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담론 모두 국가(정부) 중심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주체와 활동은 암묵적으로 기능적·보조적 존재로 간주되고,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주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담론들은 잘 와 닿지 않거나 흡족하지 않다. 그람시의 말처럼 “자신들의 언어”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류 담론에 대한 대응담론이 형성되지 않고, 관련된 담론의 발전도 더디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사회복지 지원과 같이 온정적 자선이나 시혜, 혹은 민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시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된 공공재원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적게 거두는 대신 발달된 시민사회의 기부문화를 통해 공익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가, 혹은 세금을 통해 조성된 공공재정의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가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공익활동 지원 방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영미권의 방식으로, 후자를 유럽 대륙의 방식으로 개념화 한다. 그리고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영국의 제3섹터청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한국의 시민사회에 좀더 적합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채택된 방식의 운영과정의 민주성, 즉 권력의 주체이면서 납세자인 시민들이 얼마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공공성은 ‘공공기관’에 상응하는 ‘공’과 ‘공동체’에 상응하는 ‘공’이 결합돼 구성된다. 즉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때 공공성은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성의

구성에 있어서 공만 강조되고, 共은 사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이 두 영역 간의 관계를 동등한 협력적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루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것의 공공적 해결과정에 있어서 公의 역할에 방점이 두어질 수도 있고, 共의 역할에 방점이 두어질 수도 있다. 그 선택기준은 어떤 방식이 더 해당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스웨덴의 성인교육위원회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익활동 지원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 의해 조성된 공공의 자원을 공공기관(公)이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共)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Ⅲ. 실천 : 방법론

○ 상황 #1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은 저자인 알린스키가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한 사회운동을 펼치면서 쌓인 사유와 경험을 이론화 시킨 것으로, 지역사회조직(community building)에 관한 철학, 전략, 구체적인 방법 및 다양한 조언들을 담고 있다. 프레이리가 쓴 ‘페다고지’는 아카데미즘을 넘어서 교육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소외된 자들의 자기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책에 담긴 철학과 방법은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는 도시빈민선교회로부터 이어지는 빈민운동, 풀뿌리운동으로, 후자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안적 교육활동으로 이어진다.

알린스키의 저작은 한 활동가의 치열한 사유와 경험을 잘 담아내 감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또 한편을 드는 생각은 이런 방법론은 한국의 훌륭한 활동가들의 경험 속에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자원으로서 모으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현장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소수의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있다. 이런 조건 속에 현장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그의 신체에 각인돼 있는 현장의 지식들은 증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상황 #2

실천영역과 유관한 학문에는 관련된 방법론이 교과목으로 정립돼 있다. 행정학에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업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이 있으며, 경영학에는 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관한 교과목이 있다.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유사한 사회복지학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실천론과 같은 교과목이 있다. 그런데 왜 시민운동, 자원봉사운동, 국제개발협력, 풀뿌리운동 등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방법론에 관해 정립된 교과목은 없을까? 물론 시민운동의 '전성기'라 불리는 1990년대 말부터 여러 대학의 대학원/학부 과정으로 설치된 NGO학과들이 있다. 그리고 학제과정 중에 실천방법에 관한 교과목들이 일정 정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체계화돼 있지 않다. 그런 중에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활동유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위한 전공학제와 관련된 방법론 교과목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다.

NGO학과의 교과목 뿐 아니라, 최근 시민사회에서 방법론에 관한 자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모금 방법론, 홍보 방법론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분야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관련 지식들이 생산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운영이나 활동실무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욕구는 그것을 넘어선다. 2014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활동가 교육수요 조사에서 보면, 다수 활동가들이 시급하다고 말한 교육내용 요소는 '비전/가치관', '관계맺기', '기획'과 같이 좀더 근본적이고 잘 정형화되지 않는 내용들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활동가 교육의 내용은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이나 의제—환경, 인권, 평화, 국제개발협력 등—중심의 추상수준이 높은 내용과 함께, 모금방법론, 자원봉사관리론, 홍보방법론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의 직무교육으로 양분된다. 이러한 활동가 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수준을 연결할 중위수준의 지식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활동의 거시적인 전략기획,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법, 시민사회나 단체가 맺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같은 지식들이 포함된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현재 파편화 돼 있는 다양한 관련 지식들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명한 비영리단체 연구자인 파올러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측면을 존재론(To be), 관계론(To relate), 행위론(To do)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유형론은 시민사회 공익활동 실천방법론의 체계화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에 단체활동가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 시민사회 공익활동 실천방법론의 체계구성을 시도해 볼 수 있다.³⁾ 이는 물론 예시적인 것일 뿐 실천방법론의 구성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학문영역의 지적 자원들이 접목됨으로써 좀더 유용하고 타당한 지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 공익활동 실천방법론체계의 초안이 공론장에 제출돼 논의를 촉발시키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비판과 보완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개인역량은 보통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존재론 (To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 조직의 비전, 미션, 목적 등 • 조직 : 조직운영, 행정, 회계, 법인실무 등 • 자원 : 재정, 공간, 인력(실무진, 자문단, 자원봉사자), 회원 등
관계론 (To rel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영역(정부/기업)과의 관계 : 갈등, 협력 • 영역내(시민사회) : 타 단체와의 연대, 경쟁 • 시민 : 시민들의 관심과지지, 여론 등
행위론 (To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개발과정론 : 철학적 토대, 목표설정, 기획, 계획, 홍보, 실행, 평가 등 • 활동유형(전략) : Advocacy, Service, Empowerment 등 • 활동유형(전술) : 직접행동, 캠페인 회원행사, 모금, 시민교육 등
역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기술 : 의사표현(스피치, 글쓰기), 계획서 작성 등 • 리더십 : 갈등관리, 자기관리, 설득 등 • 교양(지식) : 시민사회의 이해, 정세분석, 정치·사회 이슈 등

IV. 결 언

리프킨에 의하면 시민사회는—그는 제3섹터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공동의 문제를 토론하고, 시민이 동료시민을 돕고, 사회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 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시장(기업)이나 국가(정부) 보다 더 많은 고용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한국 에 있어서도 사회문 제의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의 기제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시 민사회의 주요한 주체인 시민사회단체와 그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지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현장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현장에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자신의 유기적 지식인을 창출하 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아직 독자적인 학제를 갖지 못한—물론 NGO학과 같은 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간학문적 영역이다. 이는 다양한 학문영역의 지적자원들이 교차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학문영역에서도 책임성있게 그와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위기요인이기도 하다. 둘째로 관련된 지식을 생산 하는 연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를 보는 국가와 기업, 즉 제도 권력을 지닌 영역의 주체들의 시각은 양가적이다. 시민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시민사회는 늘 권력에 도전하는 생각과 주체들이 배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에는 공적자본이건 사적자본이건 투자할 동기를 지니지 않고 있다.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투자주체의 선호에 부합하는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이루어 질 뿐이다. 연구활동을 위한 자본과 함께 관련된 지식이 끊임없이 생산되도록 독려하고, 지식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원활히 연결하는 이른바 ‘지식의 생태계’도 구축돼야 한다. 이는 ‘융합’의 가치 속에서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자들 중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 간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상호지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의 요청」에 대한 토론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공공성과 실용성의 함수관계”

권진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인사동길 입구를 지나가다, 한 단체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비영리기구(INPO)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선량한 인상의 두 청년이 시키는 대로, 그림판 위의 질문거리에 대해 선택한 답변에다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단체 홍보 책자를 넘기면서 설명하고 나서 바로 후원회원 가입을 추천하였다. 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회원가입을 권하니 사실 매우 당황스러워할 찰나였다. 그때 마침, 우리 중에는 국제 비영리기구를 경험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한 마디는 자비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일침을 놓기에 충분했다.

“이중에서 오버헤드 말고, 순수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뜻하지 않은 질문에 두 청년은 갑자기 당황하는 듯 했고 우물쭈물 거리며 잘 답변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실은 자신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다. 동료는 더욱 가열 찬 맹공을 이어갔다.

“브로셔에는 예산 사용 내역이 너무 모호하게 적힌 것 같은데요?” “한국오피스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죠? 모금만 하나요?”

결국, 우리 일행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떴다. 길거리 모금소를 벗어나면서 우리는 그 청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약간의 일당을 받으며 선발된 대학생일거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매섭게 몰아붙이는 동료의 확인들이 처음에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질문이 오고갈수록 많은 의문들이 밀려왔다.

사실 그날 우리 일행은 ‘열정 페이’ 하는 자원봉사자이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든, 그 추운 날

씨에 길거리모금을 하는 그 청년들의 순수함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의 후원이, 원래의 목적사업과 소위 ‘오버헤드’ (인건비를 포함한 단체의 운영비용비) 중에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회원으로 가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인을 동원하여 ‘묻지마’ 식 기업형 마케팅을 맡기는 단체의 모금방식에 응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2.

필자의 글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반부는 공익적인 측면, 즉 공공성(the public)을 중심에 놓고 구조적, 재정적 측면에서 토대를 구축하는 것, 후반부는 실용적인 또는 실천적인 측면(the practical)에서 경영과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주된 관심으로 놓는 지식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리라는 판단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언급해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깊은 고민이 녹아 있는 후반부의 구체적인 제안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시민사회단체도 구성원과 조직체계만 있어서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취지와 활동을 가진 단체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신영복의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에서 “항산(恒産) 없이 항심(恒心) 없다” 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 시민사회단체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시민사회 단체의 존재와 활동은 민주주의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명색이 민주주의 사회가 ‘시민사회’ 라는 자율적인 공간이 생략된, 정부와 기업 조직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좀 더 단순화해서 얘기해보자.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공성은 언제나 지향해야할 설립목적이자 존재근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의 경영, 살림살이가 안 된다면 반듯한 애초의 지향을 고수하기 힘들다.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 가장 큰 성장을 한 영역 중의 하나가 시민운동이 아닐까 한다. 비영리민간단체(NPO)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9월에 정부에 등록된 단체만 전국에 12,755개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미등록 단체를 합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2015. 9. 30.)

(단위 : 개)

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12,755	1,550	11,205
증 125 (2015. 6. 30. 대비)	증 19 (2015. 6. 30. 대비)	증 106 (2015. 6. 30. 대비)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주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2015.09.30) 기준

이러한 한국의 시민운동의 출현과 성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의 확산을 꼽는다. 1987년의 민주항쟁을 통해 성취된 폭발적인 자유의 공간은, 높아진 개인 권리의식을 분출할 시민사회의 확장을 불러왔던 것은 어찌하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다. 또한 점차 공론장 위로 노출되기 시작한 정부와 기업의 무능과 부패를 보면서 이들이 시민사회에 의해 감시받고 견제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건전하다는 인식이 경험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시민운동의 활동영역은 사회 전방향으로 확장되었지만, 이후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도 많은 부침과 변모를 겪게 된다. 그 밖에도 시민운동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탈물질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 중산층의 증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세력과 활동이 점차 시민사회운동으로 변모하게 되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그리고 이들의 헌신이라는 요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그다지 신심(信心)이 없다. 적어도 1990년대 이후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리고 총선연대로 표상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던 열정의 시절로부터 많이 지나온 것 같다. 소위 민주화운동의 주축이었고 시민사회의 일꾼이었던 '86그룹(386세대)' 과 주도적 인적 자원들이 정치권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보수적 시민사회단체가 출현하여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일부 시민운동단체의 정치화, 명망가들의 사익 또는 관직 추구 성향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보이는 엘리트주의, 중앙집권주의, 전방위 사업 전개방식, 상향적 책무성의 결여를 두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시민운동', '책임지지 않는 비판권력' 이라는 힐난을 받기도 한다.

3.

그러나 어쨌든 일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 모습을 단초로 시민사회가 후퇴하거나 타락했

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에 가까운 선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얘기한 시민운동의 폭발적 성장의 와중에 몇 가지 그릇된 신화(神話)가 파생되었다고 필자는 감히 생각해본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의 신화(myth of neutrality), 자율성의 신화(myth of autonomy)가 그것이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더 구체적으로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도 보수나 진보, 통일과 애국주의 등 다양한 정치이념지형을 반영하며 이것이 정치과정 속에서 갈등과 통합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 사회발전이라는 커다란 흐름(또는 당위론)으로 볼 때 위에서 얘기한 변화들은 일종의 성숙을 위한 경과 과정(course work)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각자의 '공익적 목적', 즉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규정된 공공성이 각각 특성이념과 친화적인 시민운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현상이며, 시민사회 단체에서 소수의 정치분파주의(political partisanship)나 사익추구 성향(rent-seeking inclination)은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와 활발한 사상과 담론시장, 재정적 후원 등에서 자율적으로 판단되게 될 것이다.

유명한 격언대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참여적 지식인들을 민주적으로 훈련된 공공정책 전문가로 키워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관료나 법조인, 정당인과 언론인 등이 정치가나 선출직 관료로 변모하는 것을 흔한 현상으로 인식하듯이, 시민사회의 지식인들이 정치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보다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4.

과거에는 비관과 저항의 대상이었던 권위적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트너십이나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여러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용역사업화하여 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삼기도 할 만큼 세상은 많이 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반드시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옹호자' 인지, 아니면 '국가의 보충자' 인지 두부모 자르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양가적인 역할과 활동 속에서 시민사회의 독립과 자활성은 정치화나 관변화가 진행된 만큼 침식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쩌면 시장은 더욱 냉혹하다.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관계가 우선이고 국가는 차후에 개입한다. 시장서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가치가 매겨진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도 어디까지나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도 모기업의 이해관계나 이미지에 반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참여와는 달리, 기업의 후원은 결국 이윤중심적이고 물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선용 여부에 따라서 임의적인 ‘보이는 손(정부 개입)’의 지원처럼, 기업의 취향이 확실한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제)’의 후원도 전폭적인 신뢰를 두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의 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시민사회단체 존립의 중요한 관건은 ‘할 말은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독립성의 유지이다. 이 경우 영미식의 시민 자조 체계(self-help system)도 있겠지만, 일정부분은 유럽대륙식의 국가주의적 지원 체계(statist support system)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을 제도화한, 공적 지원체계는 우선 재정지원액 자체의 확대,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엄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한 공익적 지원전담 기관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사회 단체 스스로도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무성은 상향적 책무성(후원자, 기부자,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정부), 하향적 책무성(피용호집단 계층이나 서비스 수혜자), 수평적 책무성(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 내부적 책무성(조직의 사명과 가치, 구성원의 삶)과 같은 다차원적인 방향이 된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근래의 보수정부들은 대학과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옹색함을 넘어선 그 어떤 단계를 향하는 것 같다. 마이클 샌델이 말한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 이상의 상상력을 갖지 못한 지난 정부에서는 실용적인 이유에서라면, 몇 가지 트라우마와 학습효과를 가진 지금의 정부에서는 그에 덧붙여 보다 이념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혐의를 갖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으로 그치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삼아 보다 많은 본격적인 별도의 논의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격변기 지식인의 삶과 그에 관한 기억담론 : 민영환과 〈혈죽시〉에 대한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유요문*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1905년 전후로 나타난 민영환에 대한 기억을 추적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아울러 본고는 민영환의 죽음이 신문 사설에서 어떤 담론을 만들었고, 이후 문학에서 어떻게 그의 죽음을 변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이후 민영환은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11월 30일에 자살을 하는데, 이후 『대한매일신보』나 『제국신문』의 사설에서 그의 죽음을 순국이라는 방법으로 치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1906년 7월 4일 민영환의 피가 묻은 옷을 간직했던 방에서 청죽이 솟아올랐는데 이를 혈죽자생(血竹自生) 사건이라 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이후로 민영환의 순국은 본격적인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운동과 구국 계몽운동을 발발하게 하는 기폭제로 적용한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될 점은 민영환이 을사조약 체결 직후 최초로 자결한 인물이라 그럴 법도 하지만 그 외에도 조병세, 홍만식, 송병선, 이상철, 김봉학 등 많은 지사(志士)들이 자결하였다는 점이다.¹⁾ 요컨대 민영환만이 다른 인물을 제치고 순국 선열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현상은 단순히 자결한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상징화 작업이 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문학계에서는 〈혈죽가〉류 시가를 주목했고, 이에 몇몇의 논의들이 제출된 상태이다.

김선풍²⁾은 가사 〈혈죽가〉의 작품 분석과 문학적 가치, 구성 등을 소개하여 〈혈죽가〉 연구를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극동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niceyym@naver.com

1) 도면희, 「을사조약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역사와 현실』 66, 한국역사연구회, 2007.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희목³⁾은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서우』의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혈죽’ 소재의 한시(漢詩)를 총 47제로 보고, 혈죽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논자는 <혈죽가>류 한시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민영환과 혈죽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혈죽 담론은 무엇보다 충절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민영환을 충절의 화신으로 재탄생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자료의 범위가 한시에 국한되어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 역시 그러한지는 차후 더 살펴봐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박애경⁴⁾은 ‘혈죽’이라는 상징과 그것이 지닌 문화적 전파력에 주목하여 충정공의 죽음과 ‘혈죽’ 발전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재구하고, <혈죽가>류 시가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따라서 논자는 혈죽 담론이 구비성을 가지고 있는 ‘소문’과 문자성을 가지고 있는 ‘신문’을 통해 재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소문은 계몽언론의 논조를 대중 스스로 전유할 수 있는 대안적 여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고, <혈죽가>류 시가가 계몽성과 대중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적합한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가 <혈죽가>를 충의의 아이콘으로 이미지화 시켰다는 주장과 다르게 새로운 의미를 제출하였기에 의의가 있어 보인다. 이수진⁵⁾은 앞선 선행연구들을 수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황성신문』 소재 <혈죽가>류 19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에 논의되던 ‘충절의 표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혈죽가>류 시가를 연구하면서 민영환 사후(死後)와 혈죽시 사건 후의 차이점을 비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혈죽 담론에 대한 주장 역시 혈죽 사건에 한정하여 보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혈죽가>에 대한 논의가 충절의 표상이라는 차원에서 더 진전되지 못했다. 물론 앞서 살핀 박애경의 논의가 있긴 하지만 그 논의는 매체의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민영환의 담론을 논의하면서도 민영환의 개인적인 측면을 잘 조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민영환 개인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통시적으로 밝히고, 그 변화와 더불어 문학(특히 시가)에서의 변화 양상도 함께 추적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점은 기존의 논의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다만 새로운 시각에서 <혈죽가>를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취지이다.

논의에 앞서, 여기에서 민영환에 대한 기억이란 바로 동시대 사람들이 민영환을 재현해냈던

2) 김선풍, 「혈죽가 小考」, 『연민학지』 1, 연민학회, 1993.

3) 이희목, 「민충정공혈죽시 연구」, 『한문학보』 7, 우리한문학회, 2002.

4) 박애경, 「민충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5) 이수진, 「『황성신문』 소재 민충정공의 ‘혈죽’ 담론과 시가 수록 양상」, 『동양고전연구』 52, 동양고전학회, 2013.

‘담론’이다. 즉 담론은 민영환 개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퍼져 있는 구성물들에 의해 재가공되어 주체를 오해·왜곡하여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특성은 ‘기억’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 최근 사회학자 알브박스는 개인의 기억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기에 순수한 의미의 개인기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기억의 성격을 띤다고 했다. 즉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⁶⁾ 한편,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과 회상을 구분하면서 망각과의 상호관계에 따라 기억이 제어·조종·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다시 말해, 어떤 대상에 대한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기억은 바로 일반적으로의 기억이 아니라 ‘문화적 기억의 저장 공간’, 즉 대상을 추모·추도하는 ‘기념비적 공간’으로 기능한다.⁸⁾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민영환의 기억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본고는 현재 애국열사로 표상된 민영환의 기억이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담론의 변화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적 기억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통시적으로 민영환 순국 전후와 혈족 사건 이후를 개괄하여 주체가 어떻게 표상되는지, 더 나아가 문학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조망하고자하는 시가(詩歌)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환 사후 산출된 시가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혈족 사건 이후에 산출된 시보다는 그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적지만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있었고,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혈족 사건 이전의 민영환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 중요하다. 둘째, 혈족 사건 이후 산출된 시가 작품이다. 그 양이 매우 방대한데, 여기에서는 한시를 제외한 국문시가로 한정하겠다. 국문 시가는 총 8제 26수가 남아있다. 덧붙여 지금까지 알려진 한시는 『대한매일신보』에 47제가,⁹⁾ 『황성신문』에는 19제가 존재한다.¹⁰⁾ 한시를 제외하고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신성환, 「사육신 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7쪽 참조.

7) 알라이다 아스만 著, 변학수·채연숙 譯,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33쪽.

8) 문화적 기억의 공간에 대해서 알라이다 아스만은 “종교적, 역사적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 기억의 장소가 되는 현장들은 외부적 기억 매체”에 속하며 이러한 공간은 “집단적 망각의 단계를 넘어 기억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32쪽.)

9) 이희목, 앞의 논문, 271쪽.

10) 이수진, 앞의 논문, 363-364쪽.

〈표 1〉 본 연구의 시가(詩歌) 텍스트

번호	시기	계재지	계재일	제목	장르
1	순국 이후 (1905.11.30~)	대한매일신보	1905.12.5	〈면충가〉	창가
2			1905.12.21	〈해로가〉	창가
3		제국신문	1905.12.26	〈해로가〉	창가
4	혈죽 사건 이후 (1906.7.4~)	대한매일신보	1906.7.21	〈혈죽가〉(3수)	시조
5			1906.8.3	〈민충정혈죽가〉(8수)	가사
6			1906.12.2	〈민충정공주도가〉	창가
7			1907.1.16	〈慕忠孝歌〉	창가
8			1907.2.10	〈爲國效忠歌 壹篇〉	가사
9			1907.2.10	〈慕忠歌曲〉	시조
10			1907.7.26	〈시도 癸童의 童謠〉 ¹¹⁾	시조
11			제국신문	1906.7.11	〈혈죽가〉
12		제국신문	1906.8.13	〈女學徒愛國歌〉(10수)	시조

II. 순국 전후 민영환에 대한 기억

민영환은 1861년 7월 25일 당시 권문세가였던 여흥 민씨 가문인 민겸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878년에 18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척족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 1881년에는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동부승지가 되며 빠른 승진을 하였다. 그런데 그의 생부인 민겸호는 임오군란 시 군량미를 착복하고 사리를 피하다가 구식 군인들의 반발을 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민영환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작용하였고, 따라서 임오군란 이후 사직 상소를 여러 번 올렸으나 고종은 재가하지 않았다.¹²⁾ 이때부터 집권 세력에서 관직을 한 민영환에 대한 주변의 기억은 외척 세력으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893년과 1894년에 일어난 농민 항쟁 당시 전봉준은 민영환을 탐학한 관리로 표상하고 있다.

問, 然則全羅一道貪虐 〇는 官吏만 除 〇지 起 包 〇 았 디야 八道를 一體로 〇란 意向이나
 供, 全羅一道貪虐을 除 〇고 內職으로 賣爵 〇는 權臣을 屏逐 〇면 八道가 自然 一體로 될터이오이다
 問, 全羅道監司以下로 各邑守宰가 다 貪官耶아
 供, 十에八九이다

11) 이 작품은 이미 1906년 8월 13일자 『태국신문』에 「여학도 애국가」란 제명으로 발표된 것으로, 자구의 드나듦과 순서의 변개만이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강명관·고미숙, 『근대계몽기 시가 자료집』 권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46쪽 각주 27번 참조.

12) 「승정원일기」 1884년 9월 21일(병진).

問, 何事를指目호아貪虐이라호나나
 供, 各邑守宰가上納이라稱호고或結卜에加斂호며戶役도橫徵호며稍饒之民이잇시면空然이構罪
 호아錢財勒奪호고田庄도橫侵함이非一非再외다
 問, 內職으로賣官者誰인고
 供, 惠堂閔泳駿閔泳煥高永根等이외다¹³⁾

농민 전쟁 당시 전봉준은 “내직지는 관리과 작위를 팔아먹는 것을 일로 삼고, 내외관 모두 탐학하고 있다” 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 내직 매관자 선혜청 당상관 민영준, 민영환, 고영근 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민영환은 지방민 등으로부터 탐학한 관리로 표상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때까지 민영환은 충신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돌려 생각해 본다면 전봉준의 민영환에 대한 기억은 당시 보통의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다른 외척 세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 다른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896년, 민영환은 그해 5월 26일에 열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의 대관식 축하사절로 초대받아 4월 1일에 출국하게 된다. 민영환 특사 일행은 인천→상해→요코하마→벤쿠버→뉴욕→리버풀→런던→플러싱→베를린→파르사바→모스크바로 향하게 되는데, 이 여행을 통해 민영환은 『해천추범』과 『윤치호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인 외교책을 펼치고 <천일책> 등 부국강병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독립신문』에서도 이들 일행에 대한 기사를 내보냄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서귀포에서 출발한 일부터 러시아에서 민영환이 성대한 대접을 받고 훈장까지 받은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면 민영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그리고 마침내 민영환 특사 일행은 10월 21일에 대한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3일 후의 『독립신문』과의 인터뷰가 흥미로워 보인다.

독립 신문사 사름이 일전에 아라샤 공스 다녀 온 민영환씨를 맞나 삼십분 동안을 이야기를 호여 본즉 민찬정이 이왕 민관셔와 온통 다른 사름이 된거시 미국과 구라파를 류람 호고 남의 나라 인민들 사는거슬 보고 와서 므음이 감동이 된거시 더라 민찬정이 말 호되 …… 호더라 민찬정은 춤 새 사름이 되얏고 우리가 브라건디 이분호 므음과 류람호 학문을 가지고 대군주 폐하를 잘 돕고 조선 인민을 옹터리 속에서 나오도록 호기를 집히 밋고

13) <全瑋準供草>,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8권; 乙未二月十一日 全瑋準再招問目. (자료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함; <http://db.history.go.kr/>)

14) 이러한 사실은 1986년 4월에 출간한 『독립신문』이 민영환에 대해 1896년 5월 5일과 6월 18일, 7월 28일 사실을 통해 매우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런 면모를 통해서도 『독립신문』은 민영환 혹은 그 일행이 가지고 있던 외교력에 대해서 기대가 컸고 따라서 이들 일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브라노라¹⁵⁾

『독립신문』에서는 민영환이 “종래의 민판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평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나라를 외국과 같이 중흥하여 군주를 도와 조선 인민을 구해야 할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사료인 『매천야록』에서도 “구미를 견학하고 돌아온 후, 자못 천하대세를 궁구하고 국사가 날로 그릇됨을 통분하였고,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¹⁶⁾라고 기술되어 있어 『독립신문』의 내용과 상응한다. 매체에 의한 개입이든 개인의 노력이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민영환에 대한 기억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고종을 압박하여 해산조치가 내려졌을 때에도 협회의 간부인 정교는 민영환을 끝까지 믿었다¹⁷⁾는 점에서 민영환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변화의 기점은 민영환이 특사로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론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애국’을 다하는 충신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¹⁸⁾ 그렇게 1905년까지 민영환은 약 10년간을 부국강병책을 시행했고, 따라서 민영환에 대한 주변의 기억은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비밀리에 협약되자, 민영환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병세를 비롯한 백관들과 함께 연명 상소로써 을사조약을 처형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⁹⁾ 그러나 고종 황제의 비답이 내리기도 전에 일제 헌병들의 무력에 의해 조병세는 체포되고 강제 해산 당하였다. <천일책>에서 밝혔듯이, 민영환이 희망한 정치는 입헌군주제였다. 그런데 그런 꿈이 무산되자 11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소도로 자결을 하게 된다. 그 직후 12월부터 언론은 그의 죽음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侍從武官長閔泳煥氏는 皇室肺腑之臣으로 公正忠直은 令望이 素有하고 歐美列邦에 遊覽은 識見으로 時務에 通達은 지라 朝野輿情이 皆此公의 進退로써 國家의 安危를卜은 지니 近日新條約事件에 對은야 大小臣僚로 共히 伏闕上疏은야 大勢를 挽回코져은 지니 奸細輩에 輒轢으로 由은야 拘拿懲判之命을 被은 지니 於時乎國家事가 無復可爲之道라 巨天孤忠이 無地可效일식

15) 『독립신문』, 1896년 10월 24일 사설. (이후 모든 신문의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자료를 참조함; <http://www.mediagaon.or.kr/>)

16) 황현, 『매천야록』 4권, 광무 9년 11월.

17) 정교, 『대한계년사』(上), 국사편찬위원회, 1957, 330쪽; “지금 정부 요인 가운데 인민들이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오직 민영환과 한규설뿐입니다. 만약 민영환을 군부대신과 경무사에 임명하신다면 중심(衆心)은 조금 안정될 것입니다.”

18) 민영환의 <천일책>을 보면, 민영환은 황권을 중심으로 민권의 조화를 꾀하였다. 그래서 민영환은 황권을 수호하는 한편,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가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그는 독립협회에게 많은 발언의 기회를 준다.

19) 『조선왕조실록』, 고종 42년 11월 28일 조.

乃引刀自刎하여 死於忠義하였스니 於公에는 可謂無憾이어나와 噫라 大韓國運이여 此公이 若
在政府會議之列이면 所謂新條約이 豈至於此리오 嗚呼痛哉로다²⁰⁾

시종무관장 민영환씨등이 평리원에 玆되하다가 분간방송하라신 처분이 나라신지라 일반
진신스셔가 빅목전도가에 회동하여 玆되하기를 공의홀시 민영환씨는 던동 리완식씨집에
스쳐오았더니 본일상오륙시량에 칼을들고 목을질너 세상을 리별하여 텃하에 스래하앗다더
라²¹⁾

우에말흔바 민공의유서를 자에번역하노라 오호라 나라의 슈치와 인민의 욕됨이 이디경이
되야 우리인민이 장츠살기를 경장하난 가온되서 소멸홀지라 대더 살기를 요구하난자난 반
다시 죽난거시오 죽기를괴약하난자난 사난거슬엇난거슨 제공인들엇지몰으리오 영환은 한갓
한번죽어우리러 호아은을 갑고 써 우리이천만동포형데에게 사레하고 영환은죽어도죽지안코
괴어히 제군들을 군천지하에 보기를 괴약하노니 다형이 동포형데들은 갑절이나 분려하고 쫓
과 괴운을 곳게하여 학문을힘쓰고 마암을 밋고 죽기로 힘써 우리 즈유독립을 회복흔즉 죽
은자가 맛당이 명명흔 가온데 셔라도 깃버 우슬지니 오호라 쥬금도 바라난바를 일치말게하
기로 우리대한테국 이천만동포에게 영결을 고평노라 하앗더라²²⁾

위의 〈一人死忠〉이나 〈閔氏盡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영환은 순국 전에 가지고 있었던 충
신의 이미지가 그대로 옮겨져 와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에 대한 이미지는 충신의 화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언론은 민영
환의 유서를 공개함과 동시에 유서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 충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
고 있다. 이 논설을 보면 “대한 인민이 민공의 충혼과 의백을 우리러 위로하고자 하려면, 오직
그 지기를 견고히 하여 학문에 힘을 써서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는데 있으니, 오호라, 대한
인민은 이 유서 일백 삼십 칠 자를 각기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분격하 마음을 떨쳐 일으켜
다 함께 죽을 혈심으로 자유 독립을 극복할지이다.”²³⁾라고 하여 언론은 민영환의 충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항일 투쟁과 연결 짓고자 의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말하자면, 민영환은 일제의
을사조약에 대항되는 담론 내지 기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20) 〈一人死忠〉,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 잡보.

21) 〈閔氏盡忠〉, 『제국신문』, 1905년 12월 1일 잡보.

22) 〈遺書翻譯〉, 『제국신문』, 1905년 12월 2일 잡보.

23) 〈讀桂庭閔輔國遺書〉,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3일, 논설; 然則大韓人民이 閔公의 忠魂義魄을 仰慰코져하면오즉 其志氣를 堅固히하며 學問을 勉勵하여 自由獨立을 恢復하느디 在하니 嗚呼라 大韓人民은 此遺書一百三十七을 各其銘心鏤하여 奮憤俱死할 血心으로 自由獨立을 克復할지이다

그러나 시가(詩歌)의 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론의 이러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민영환이 죽은 1905년 12월에만 그에 대한 기사나 논설·시가가 ‘집중적’으로 창작·향유(향유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되었다. 즉 12월이 지나자 그 이후로 민영환은 그저 한 땀어 죽은 충신이었을 따름이었다. 물론 『황성신문』 1906년 2월자에 한시 2제가 실려 있지만, 이는 장지연의 「시일아방성대곡」으로 인해 『황성신문』이 정간되고 1906년 2월부터 再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다소 있다. 요컨대 혈족 사건 이전까지 민영환의 자결은 그다지 큰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민영환에 대한 충신의 기억을 재생산하려면 창작자와 향유자 등 그 계층의 폭을 넓게 가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언론에서는 요란스럽게 민영환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론이 민영환의 죽음에 대해 단지 한 달까지만 집중적으로 지속되다가 그쳤다는 것은 그만큼 세간의 집중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 부럽더라 부럽더라 민보국대감 부럽더라
 이 디감도 평시에는 별사람 안이더니
 나라일에 분격하야 일조단충 일운 후로
 장안익성 우는 소리 부모상을 당흐은 듯
 정충디절 놓흔 일흠 동서양에 빗히 나네
 우리들도 엇지 허면 나라 위히 성공홀가
 무감순검 병정이나 벌썩구종 상노 중에
 충분지심 잇스며는 경각간에 성공허리
 내 한몸을 등히 잇고 역적놈을 처치허면
 죽들리도 충신일흠 천썩빅디 전홀지오
 쳐즈권속 시는 것은 제상공의 즈지흐니
 우리갓흔 상놈들도 충신 한번 되야 보세
 충신 한번 되고 보면 민보국디감 부럽손가²⁴⁾

(나) 精忠일네 精忠일네 우리 闕公 精忠일네
 大節일네 大節일네 우리 闕公 大節일네
 이 忠誠이 節概는 萬古에도 죽이업네
 빗치나네 빗치나네 大韓山川 빗치나네
 期死得生 발근말삼 遺書中에 丁寧하다
 同胞들아 同胞들아 二千萬의 同胞들아

24) 屏門長席生 著, 〈면충가〉,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5일.

ㅎ여보세 ㅎ여보세 結心戮力 ㅎ여보세
 ㅎ여보세 ㅎ여보세 死中求生 ㅎ여보세
 堅志勉學 ㅂ흔 訓戒 우리 學徒 이질순가
 學徒들아 學徒들아 大韓帝國 學徒들아
 ㅎ여보세 ㅎ여보세 堅其志氣 ㅎ여보세
 ㅎ여보세 ㅎ여보세 勉其學問 ㅎ여보세
 獨立일세 獨立일세 大韓帝國 獨立일세
 自由로세 自由로세 二千萬民 自由로세
 이 獨立 이 自由는 우리 閔公 功이로다
 功이로다 功이로다 ㅂ흘니신 功이로다²⁵⁾

위의 인용된 (가)와 (나)는 모두 민영환이 죽은 뒤 그해 12월에 창작된 작품이다. 특히 (가)는 순절 후 5일 만에 지어졌고, (나)는 발인할 때 불렀던 상여가(喪輿歌)이기에 의미가 깊다. (가)에서 ‘정충티절 ㅂ흔 일흠 동서양에 빗히 나네’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화자는 민영환의 순국 후 그를 확실하게 충신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화자는 민영환에 대한 기억을 충신으로 공고히 하여 ‘추모’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 한몸을 등히 이고 역적놈을 처치허면/우리갓흔 상놈들도 충신 한번 되야 보세’ 라는 구절은 무엇보다 개인의 행동을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민영환의 죽음은 비록 자결이었지만, 언론은 민영환의 죽음을 행동적인 형태로 형상화하였고, 이는 민중들에게 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이런 언론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영환의 기억이 외부의 담론에 영향 받아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민영환의 죽음은 일본에 대한 반대 혹은 대항 감정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다분하였기에 언론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는 ‘期死得生’, ‘結心戮力’, ‘死中求生’, ‘堅志勉學’ 등 민영환의 유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시어로 선택했다. 상여가인 만큼 학도생인 작가 혹은 화자는 고인의 유서를 통해 고인을 추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여기에서는 ‘자유’ 와 ‘독립’ 을 갈망하면서도 그러한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 민영환의 功임을 밝히고 있다. 즉, 화자는 유서의 유지를 그대로 따른다면 화자가 갈망하는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의 독립이란 바로 『대한매일신보』 〈讀桂庭閔輔國遺書〉에서 해설했듯이, 폴란드나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울삼은 일본으로부터의 ‘자유’ 라고 생각할 수 있다.²⁶⁾ 그래서 (나)는 그 작가, 화자, 대상 모

25) 英語學徒等 著, 〈英語學徒等이 閔公發靑時에 唱흔 薤露歌〉,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21일. (앞으로 줄여서 〈해로가〉라고 지칭함.)

26) 〈讀桂庭閔輔國遺書〉,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3일, 논설; 彼波蘭賣國黨을 觀호라 彼其私權을 保有호고 身命을 苟存을 妄想으로 他國의 勢力을 藉賴코져호다가 畢竟波蘭이 滅亡호인 賣國

두 학도들이기 때문에 (가)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않는다. 다만 면학을 통한 항일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민영환의 충신 이미지와 반일 감정의 접목을 시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민영환의 죽음은 이제 항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²⁷⁾ 실상 이러한 점은 『주한일본공사기록』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가) 오늘 아침 민영환의 자살 사건이 있게 되자 인심 동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본관은 장곡천 대장의 주의도 있어서 온화한 수단을 취하여 인심을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만 지금 일부 군중들이 종로에 있는 우리 헌병 파견소를 습격하였기 때문에 헌병 대장과 우리 순사 한 명도 역시 부상당하였음. 상황이 이와 같이 되었지만 본사는 당초 목적을 향하여 될 수 있는 데까지 온화한 수단을 취하여 그들의 진정에 노력할 것임.²⁸⁾

(나) 민영환이 자살을 한 데 대하여 일반의 감정을 융화시킬 계획으로서 본사와 장곡천 대장의 일치된 의견으로 동인의 사후에 대한 후대를 내려서 국장에 부치기 바란다는 뜻을 황제께 주청한 결과 황제는 어제 조칙을 발하여 충문공(忠文公)이라는 휘호를 추증할 것과 아울러 일등예상(一等禮喪)을 명한다는 뜻을 발표함.²⁹⁾

민영환의 자결이 대중들에게 반일 정서로 표출되자 일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민영환에게 충문공이라는 휘호와 일등예상의 직위를 주어 민심을 무마하고자 하였다.³⁰⁾ 즉, 일제에서는 민영환의 충신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격상시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일 감정을 잠재우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확실히 12월까지 언론은 민영환의 죽음을 통해 충절의 화신으로서 위치시켜서 반일 감정을 높이려는 시도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유연한 대응에 따라 언론의 시도는 무마되고 만다. 대항 담론의 불씨가 꺼져버린 것이다. 이런 점은 순국 후에 시가 작품이 2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대중적 관심이 거세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순국 후의 민영환

黨이 亦無一箇得活者호니 此는 要生者가 必死호 前鑑이아인가또 美國獨立黨을 觀호라 千萬人衆이 個箇히 自由獨立을 死守불失호기로 一心團結호야 百難을 不避호고 大業을 竟成호야 獨立光輝가 世界에 震耀호얏스니 此는 期死者가 得生호 明效가아인가

27) 이러한 점은 한시에서도 엿보인다. 〈賀閔忠正靈魄〉이나 〈哭閔忠正公〉에서도 민영환을 추모하는 동시에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차후 글을 달리하도록 하겠다.

28) 발송자 林 公使, 「一. 本省往電 一~四」, 권수 제26권, 문서제목 339 「민영환 자살 후 종로 헌병 파견소 피습에 관한 건」, 제486호, 1905년 11월 30일 오후 6시; 이성현, 「민영환의 「殉國」 담론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 26, 강원사학회, 2014, 123쪽 재인용.

29) 발송자 林 公使, 「一. 本省往電 一~四」, 권수 제26권, 문서제목 344 「민영환 국장건의 주청에 관한 건」, 제491호, 1905년 12월 2일 오후 3시 30분; 이성현, 앞의 논문, 125쪽 재인용.

30) 이성현, 앞의 논문, 125쪽.

은 그저 한(恨)을 품고 죽은 불쌍한 충신의 이미지 혹은 기억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아직 민영환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충의의 화신으로 남겨져 있었다. 요컨대 아직 문화적 기억을 ‘재생산’ 할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Ⅲ. 혈죽 사건 이후 민영환에 대한 기억

민영환이 순국한 1905년 11월 30일 이후 약 250일이 지나서 1906년 7월 4일에 혈죽 자생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인 즉 그가 자결할 때 사용했던 칼과 피 묻은 옷을 집안의 방 마루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 박씨가 그 옷을 벌레 말리기 위해 방으로 가보니 새 죽순이 그 하의에 돋아나 있었다고 한다. 그 죽순은 네 개의 뿔기에 아홉 개의 줄기가 있었으며 가늘기는 벼 마디와 같고, 뿌리와 줄기는 실과 같이 가늘어 겨우 대나무 모습을 이루고 있었으나 너무 약하여 부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³¹⁾ 이러한 일은 바로 다음날인 1906년 7월 5일자 신문 언론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다.

昨日에 閔忠正公家人이 來于本社 訶야 該宅에 綠竹自生之實을 報道 訶니 盖忠正公生時에 恒置衣几 訶든 房突下에 綠竹이 忽生 訶야 挺然直上 訶지라 昔에 鄭圃隱授命之地에 善竹이 自生 訶 故命其橋曰善竹橋라 訶더니 今閔忠正家中에 綠竹이 又生 訶니 盖此兩公의 貞忠大節이 百世一揆故로 此竹之生이 亦同一其種이라 嗚呼其寄哉로다³²⁾

민충정공 정충대절은 세인디 다 아는 바이어니와 추정공 순절 訶실적에 입었던 의복에 현흔이 반반 訶 것을 그침방마루에 두엇더니 작일에 그방을 소쇄초로 들어가본즉 난데없는 푸른디 네기가 마루틈으로 그 의복밧헤 낫다 訶기로 경탄 訶야 본사원이 던도 訶야 가본즉 과연 전언과 갓흔지라 충의 혈절이 하늘에 사뭇친거슬 가히 알깃더라³³⁾

31) 황현, 앞의 책, 제 5권, 광무 10년 병오(1906년).

32) 〈綠竹自生〉,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5일 잡보.

33) 〈忠血成旬〉, 『제국신문』, 1906년 7월 5일 잡보.



〈그림1〉 고려대박물관 소장 〈혈죽 사진〉



〈그림2〉 고려대박물관 소장 〈혈죽 실물〉

위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론은 250일이 지난 후에도 민영환을 충절의 화신으로 기억하면서 지난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그의 죽음이 다시금 추모의 공간으로 재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이전의 ‘충신’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재생산되기에 이른다. 이는 『대한매일신보』가 혈죽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혈죽을 정몽주의 善竹橋와 비교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민영환의 충절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민영환을 정몽주와 관련지은 것은 그 의미가 심상치 않다. 다시 말해, 정몽주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기 전 자신의 절개를 관철하다가 죽은 충신의 표상이다. 즉, 정몽주는 군주 혹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충신이라는 점과 함께 외부의 권력이나 힘에도 굽히지 않은 절개의 이미지로 표상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영환과 정몽주를 연결시키고자 한 것은 대나무라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굽히지 않는 ‘절개’라는 점이 더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국신문』에서는 ‘충의 혈절이 하늘에 사뭇친거슬 가히 알깃더라’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죽음을 혈죽과 절개의 합성어인 ‘血節’로 표상하여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요컨대 위의 기사를 통해 민영환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 충신에서 절개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인 7월 6일 『황성신문』에서는 이 혈죽 사건에 대해 더욱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다.

大節爲竹 典洞故閔忠正公泳煥氏家寢室後夾房軒間에 無根히 叢竹이 生호얏다호기로 往見호
 則果如所聞이거 問其家人則答曰閔忠正殉節時血痕遺衣와 自寘裁호던 遺劔을 此房에 藏호고
 軒窓을 閉鎖호미 已久矣러니 日昨에 偶然히 開戶視之호니 丁丁綠筍이 房軒을 穿出云故로 驚
 異而詳視호 則第一幹은 長可爲數尺이라 椅子에 依附半臥호얏고 第二第三第四는 叢差以生호
 야 四叢九幹이오 竹葉은 三十三枚인디 漢城士女가 雲集호야 觀光호는 景況이 人山人海를
 成호며 莫不嗟歎曰閔公義節이 炳若星日이더니 今見此竹에 尤極欽仰이라호고 或感泣流涕者도
 有호더라³⁴⁾

34) 〈大節爲竹〉, 『황성신문』, 1906년 7월 6일 잡보.

위의 논설은 민영환의 식솔들의 입을 빌려, 그의 피 묻은 옷과 단도를 보관하던 옷 방에서 녹순이 자라나 기이한 현상을 알리고 있다. 특히 녹죽의 줄기마다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 실상을 알렸고, 녹죽을 보기위해 모인 인파들로 집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민영환의 충절을 공경하며 우러르는 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말로, 당시 '녹죽'의 발견이 몰고 온 열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³⁵⁾ 여기에서도 〈大節爲竹〉이라는 제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혈죽이 자생한 이유를 바로 민영환의 '절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민영환의 절개 때문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더욱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에 선교사 『뫼텔 주교의 일기』를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보도록 하겠다.

7월 6일(1906년)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민영환의 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기적을 보도했다. 피로 얼룩진 그의 옷가지며 그가 자결하는 데 사용한 단도를 넣어 둔 헛간에서 갑자기 뿌리도 없이 이상하게 대나무 하나가 생겼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보러 갔다. 종로에서 典洞 거리는 그의 집까지 오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오늘 그곳으로 순례하려는 사람들의 무리였다. 집과 마당에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각기 다른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남녀 군중은 서로 다투어 그 기적을 보러 했다. 다행히도 나는 낮익은 그 집 식구 한 사람이 나를 알아봄으로써 그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 과연 첫인상은 놀라운 것이었다. 장판지로 바른 마루 틈 사이로 죽순들이 솟아 나와 있었다. 4개의 순에서 9개의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또 그것들이 나 있는 넓이가 30cm 정도였다. 첫 번째 순은 길이가 60내지 70cm나 되었으므로 지탱이 어려워 근처에 있는 의자에 기대 놓았고, 나머지 순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 지탱이 되고 있었다. …… 신문은 9개의 줄기에서 33개의 잎이 나 있다고 보도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잎이 45개라고 말했는데, 그 숨은 이유인 즉 영웅(민영환)이 45세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직접 그 잎들을 세어 보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뿐더러 이제 겨우 싹튼 잎들까지 계산되어질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계산은 흔히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군중은 특히 호기심에서였고, 그래서 신문에서 언급한 감동이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적으로 믿으려 하지만 어떤 속임수에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마루 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전혀 모르며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들 대답했다. 나도 그랬으면 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방 주위를 둘러보고, 특히 마루 밑에 통로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왔다.³⁶⁾

35) 이수진, 앞의 논문, 359쪽.

외국인 카톨릭 신자의 눈에도 이 혈죽은 신기한 존재였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혈죽을 민영환의 현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혈죽의 앞의 개수를 통해 민영환을 재현하는 세세함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융통성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바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혈죽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불러내는 ‘힘’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상대적 공간관에 따르면, 공간의 의미는 사물과 사물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온다.³⁷⁾ 동일한 공간이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관찰자가 그 공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 ‘자연적’ 으로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가 그 공간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이며, 그렇게 변화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고유명사’ 로서의 공간이다.³⁸⁾ 그러므로 사람들이 혈죽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그동안 잊어버렸던 충신 민영환에 대한 기억 이상의 무언가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를 더 섬세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당시 혈죽에 대해 수없이 창작되고 재현되었던 <혈죽가>류 시가를 통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생기게 된다.

협실의 소슨 디는 충정공 혈적이라
우로울 불식하고 방중의 풀은 쫓슨
지금의 위국충심을 진각세계

충정의 구든 절기 피을 미즈 디가 도여
누상의 흘노 소사 만민을 경동키는
인심이 비여잡초키로 독야청청

충정공 고든 절기 포은 선성 우회로다
석교에 소슨 디도 선죽이라 유전커든
허물며 방중에 는 디야 일너 무삼³⁹⁾

36) 뫼텔 著, 한국교회사연구소 譯, 『뫼텔 주교의 일기 4권: 1906년~1910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61~63쪽.

37)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절대공간 이론을 비판하면서 상대적 공간 개념 및 상대주의적 개념을 주장했는데, 모든 사물의 ‘위치관계’ 는 ‘각 다른 사물과의 관계’ 에서 도출된다는 것이다. 각 물체의 위치는 다른 물체에 대한 그때그때의 관계, 그러니까 언제나 오로지 “무엇과의 관계 속” 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르쿠스 슈뢰르,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배정희 譯, 에코리브르, 2010, 43-44쪽;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333쪽 각주 8번 재인용.

38) 김정녀, 앞의 논문, 333-334쪽 참조.

(가)는 과거의 충절지사들을 현재의 혈죽이 솟은 혈죽당에 소환하고 있다. 소환된 이들은 각각 백이, 숙제, 비간, 굴원, 노중연, 제갈량, 문천상, 육수부, 정몽주 등 그 면면이 화려하다. 화자는 이들을 혈죽당에 불러서 민영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절개를 지키다 죽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승화된 이들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회자된다. 따라서 화자가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민영환을 둔 이유는 바로 절개의 표상으로 위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는 충신의 이미지와 함께 절개의 이미지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개성의 선비인 林圭永, 리면根, 車斗漸 세 명이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을 나누어 부른 시조를 읊긴 것이다. 위 시에서 민영환은 충신의 표상임과 동시에 죽음으로써 애국을 보답한 절개의 표상으로도 그려져 있다. 초장에 ‘태산과 같이 높은 절개(泰山高節)’라는 시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혈죽 사건은 대중들에게 절개의 상징이 되었고, 이 절개는 행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 되었다. 특히 종장에 죽엽잔을 동포에게 부운다는 표현은 민영환의 절개가 동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의 절개는 민영환의 죽음에 대한 동정 보다는 죽음을 초월한 절개를 더욱 부각시켜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동포가 많아졌으면 하는 ‘행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혈죽가>류 시가는 아니지만 타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타령의 제 5수를 보자.

五

죽으면 죽을 법 흐렸지 네흔티 굴홀 수 업슬 길
이천만 붉은 피 썩릴 썩 두 집이 다 절단나겟지
흔번 죽기는 상스지 민충정 춤대가 부럽군
아스라구 말나구 그다지 괘시 말나구⁴²⁾

위 시의 화자는 죽었으면 죽었지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특이한 점은 바로 자연스럽게 민영환의 혈죽(춤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영환의 기억이 저항의 이미지로 완전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 민영환은 충의의 화신으로만 기억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절개의 상징으

子야 竹葉盃의 술 부어라 大韓獨立. 강명관·고미숙 편역, 앞의 책, 33쪽 참조. 그런데 이 시는 최면암의 부분을 변형 혹은 삽입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찌되었든 민영환에 대한 절개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42) <말나구타령>,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7일.

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절개를 표상하는 혈죽은 언론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대중들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여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혈죽가〉류 시가가 순국 후의 시가보다 더 많이 재생산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당한 현실극복하려는 행동 의지’의 연결고리가 더 컸기에 민영환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四

장지라 충정공이 갈충보국 흐셨스니
 싱명은 버렸스나 명절은 영싱이라
 우리도 학문을 열심히여 만일이나

五

점점히 흘린 피는 문명의 쫓치 튀고
 창창히 소스 디는 충이의 짝이로다
 아마도 이 쫓과 이 짝은 불락불쇠

六

성덕이 인이 하야 충효렬이 이천만을
 붉은 피 프른 디는 민충정 쏘일년가
 아모나 국권을 침범커든 스싱결단

七

포은죽 계명죽은 허언이라 웃지 마소
 세계만국 업갓마는 대한 스적 분명하다
 아마도 정충대결은 황탄감동

八

가이 업다 삼십세를 헛되이 지닛더니
 민충정 혈죽가를 눈물 석거 불너 보니
 아모리 년쇼셔싱인들 맘 다르라⁴³⁾

위 작품은 이미 1906년 8월 13일 『제국신문』에 〈女學徒 愛國歌〉라는 제명으로 발표된 것인데

43) 〈시도 癸童의 童謠〉,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6일.

그 화자가 여성이고 10명이 한 수씩 지어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⁴⁴⁾ 특히 이 시는 학도들이 지은 것이기에 애국충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표면에는 애국 충절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 4수에 ‘명절(名節)은 영성이라’, 제 5수에 ‘불락불쇠(不落不衰)’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혈족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다. 즉 민영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간직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혈족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영환에 대한 기억은 영원한 저항의 화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면모는 제 6수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즉 민영환이 죽은 것처럼 누구든지 국권을 침범한다면 죽기살기로 저항할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가 잘 표명되어 있다.

제 8수에서 나오는 ‘민충정 혈족가’가 앞서 살핀 대구여사의 〈혈족가〉인지는 확실치 않으나,⁴⁵⁾ 혈족에 대한 노래는 분명 대중들에게 있어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공감의 장으로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논지를 정리하자면, 민영환의 순국 후의 시가는 개인의 추모 차원에서 머물러 재생산이 불가했지만, 혈족 사건 이후의 시가는 대중에게 저항 차원에서 차후 수많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혈족가〉류 시가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민영환의 자결은 다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충신의 표상에서 그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 격렬히 저항했던 영원한 투사의 상징으로 그 기억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혈족시 시가(詩歌)들은 분명 민영환의 기억을 변형시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호명 내지 ‘요청’ 되어 그 목적에 부합되었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들 화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충(忠)이나 절의(節義)를 이미지·시각화하여 일제의 저항 내지 민족 정신 고취 등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편으로 어떤 연구자들은 혈족시가 근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으면 서도 근대 관념을 채용하지 않고 충(忠)이나 절의(節義) 등 중세 관념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혈족시가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 꾸준히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혈족시와 더불어 민영환의 이미지는 중세의 관념을 빌어왔지만 끊임없이 전변되어 그 시대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변용하

44) 『대한매일신보』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제국신문』에 실려있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충 정공은 인국성 더운 피로 우리 두뢰에 부엌넉 님 흠을며 갈과 옷을 두엇던 방에서 네 씨르기 참 딩가 소스나서 만세에 청청불기 흥였스니 우리도 네 사적의 썩어지고 음란흔 노릿는 불으지 말 기 위하야 혈족가 십절을 지여 보넉오니 귀 신문에 그지하야 일반 동포로 흥야금 이갓흔 노릿 를 불너 충절의 반일이라도 효측케 흥시를 바라오. 광무십년 팔월 일일 제국신문사장 각하.”

45) 그러나 대구여사의 〈혈족가〉가 애국가의 전신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불렸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혈죽시가 중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면 타당하나, 오히려 혈죽시는 중세의 관념을 통해 근대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그러므로 혈죽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중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시대적 매개(媒介) 자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IV. 나기는 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민영환에 대한 기억 담론은 근대의 이행과 발맞춰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논의에서 주목했던 〈혈죽가〉류 시기는 다만 계몽 시기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기에 그 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본고는 〈혈죽가〉류 시기를 민영환 개인의 시각에서 재구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의 문화적 기억이 변화함에 따라 시가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추적해 보았다. 그러므로 순국 이전에도 민영환은 충신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고, 순국 후 그의 기억은 충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의 충신에 대한 기억은 언론 권력을 통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려 했지만 대중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자질은 갖추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후 혈죽자생 사건을 통해 민영환은 충신의 상징과 더불어 절개의 상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민영환에 대한 기억은 혈죽과 발맞춰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재현되었고, 이는 충신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대중들이 충분히 공감할 부분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 된지 60년이 지났지만 민영환에 대한 기억과 그의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게 해줄 것 같다. 해방 직후부터 민영환은 순국 선열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억되었다. 앞서 살핀대로 민영환은 그의 순국으로부터 일제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혈죽자생 사건으로부터 그의 저항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해방 직후 순국 선열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당국은 1946년 10월 1일자로 일제가 붙인 동 이름과 거리 이름을 없애고 세종로·을지로·원효로·충무로·퇴계로·'충정로' 등을 제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1957년에는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안국동 로터리에서 충정공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⁴⁶⁾ 그의 열사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념·기억하려는 작업인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영환은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 동상은 1971년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창덕궁 돈화문 왼쪽의 녹지대로 이전되었다가,⁴⁷⁾ 2002년 창덕궁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생가 터로 알려진 조계사와 일접한 체신박물관

46) 『조선일보』 1957년 8월 31일 〈민충정공 동상 제막〉

47) 『조선일보』 1971년 10월 14일 〈근대화에 밀려난 민충정공〉

주변 시민광장 조성터로 옮겨지는 운명을 맞이하였다.⁴⁸⁾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민영환은 어떤 존재일까? 단지 교과서에 한 줄로 축약되어 암기해야 될 대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닐까? 을사조약 이후 민영환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혈죽자생 사건 이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다르듯이, 지금의 우리 역시 그를 재현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필요했던 영웅은 을사조약 이후 죽음을 통해 다시 충신으로 그려지고, 차후 건국에 필요한 저항의 열사로 기억되고 있다. 한 사람이 시대의 필요에 의하여 재현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공적 기억에 의한 개인의 기억 변화는 차후 어떻게 다시 변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자료

강명관·고미숙. 2000. **근대계몽기 시가 자료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교. 1957. **대한계년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www.mediagaon.or.kr>) :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가온(<http://www.mediagaon.or.kr>) :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조선일보』

2. 논문

김선풍. 1993. “혈죽가 小考,” **연민학지**, 1. 연민학회.

김정녀. 2011.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우리어문연구**, 41.

도면희. 2007. “을사조약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역사와 현실**, 66.

뫼텔. 1998. **뫼텔 주교의 일기**,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박애경. 2009. “민중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

48) 『조선일보』 2002년 10월 22일 <“우정총국 부근으로” 종로구, 시에 건의>

- 신성환. 2011. “사육신 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알라이다 아스만. 2011.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 이성현. 2014. “민영환의 ‘殉國’ 담론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 26.
- 이수진. 2013. “〈황성신문〉 소재 민충정공의 ‘혈죽’ 담론과 시가 수록 양상,” **동양고전연구**, 52.
- 이희목. 2002. “민충정공혈죽시 연구,” **한문학보**, 7.

「격변기 지식인의 삶과 그에 관한 기억담론」에 대한 토론

정장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 논문은 1905년 전후 일제의 폭거에 저항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죽음에 대한 지식인들의 기억이 재구축되고 형상이 변환하는 것에 주목한 글이다. 시대의 격동기를 맞이한 한 인물에 대한 기억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변형되고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 또한 신문에 연재된 ‘시가’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에 존재한 의식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토론자의 전공이 ‘구비문학’이어서 ‘시가’를 다룬 본 논문에 대해 자칫 미숙한 질문을 할 수 있으나, 발표자에게 본고를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단순한 작품의 수가 대중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가?

발표자는 사람의 기억이 가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영환의 형상이 변화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는 민영환의 형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를 ‘혈죽 사건’으로 보고 민영환의 형상을 전·후의 차이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순국이후에 담론형성이 정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가 작품이 2수만이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 문학작품이 창작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작품의 수가 적다는 것이 담론이 정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가?

발표자가 지적한대로 민영환 순국사건 이후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민족 신문에서 감정에 호소한 글을 잇달아 기고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음독자결한 조병세와 같이 일제에 대항한 지식인들의 강한 반발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익현은 조병세와 민영환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독립을 주창하는 운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단

순히 시가작품이 적다고 담론이 주춤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에는 민영환 사후 그에 대한 충신의 이미지와 일제에 대한 반발이 ‘실제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발표자의 지적대로 ‘일제의 방해’가 있었기에 문학작품이 적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즉, 작품의 수가 적은 것은 민영환의 죽음이후 촉발된 국민저항의식이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담론이 정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2. 민영환의 ‘충신’ 이미지는 혈족 사건 이후 변화했는가?

발표자는 3장에서 혈족 사건 이후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재구축된 민영환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순국사건과 혈족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민영환에 대한 평가는 ‘충신’이라는 형상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담론의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강하며, 혈족 사건 이후 민영환의 이미지는 조선의 자유독립이라는 국가와 민족 기반의 근대적 의식에 맞춰 문학작품에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중세의 가치관을 옹호했다고 주장한다.¹⁾ 순국사건과 혈족 사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결국 격동기를 맞이하여 저항한 ‘충신 민영환’에 맞춰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혈족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민영환의 이미지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발표자가 2장에서 지적한 순국사건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앞서 제시한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 민영환은 순국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순방을 통해 다른 나라를 시찰하고 이를 조선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또한 민영환은 민권을 강화하고, 만민공동회를 지원하여 유사 국회의 형태를 꿈꾼 소위 ‘개혁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개혁적’인 인물은 아이러니하게 죽음 이후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다. 특히 그 계기가 된 것은 ‘순국사건’이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토론자가 보기에 순국 이전의 민영환은 개혁적 인물로 표상이 되었고, 발표자도 지적한대로 순국 이후의 모습은 국치를 당하여 이를 비분강개해 자결한 인물로 바뀐다.

정리해보자면 순국 이전의 민영환은 개혁, 순국 사건 이후는 억울한 현실을 민중에게 자각시키는 인물, 혈족 사건 이후는 영원한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순국 이전과 순국 이후의 이미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순국 이전에는 개혁을 위한 인물이었지만, 순국 이후에는 보수적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로 바뀐 것이다. 2장에서 민영환을 통해 언론이 이용

1) 발표문의 본문 38쪽.

했으나 이 같은 의도가 실패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 현상을 보면 민영환에 대한 언론의 이미지구축이 성공했고, 이것이 혈죽 사건을 통해 대대적으로 표출이 된 거라 생각한다. 즉 민영환의 이미지 변화는 순국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순국과 절개라는 형태로 분화가 된 것은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3. 일부 질문

- 제목에 격변기 지식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격변기의 기준과 지식인을 어디까지로 놓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 2장에서 일제의 억압과 담론의 축소과정에 대한 논의가 너무 소략되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축소되었는지 살피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 만약 제목 그대로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면, 2장에서 신문기사나 작품이 적어 민영환에 대한 지식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작품의 수만 적을 따름이지 민영환과 조병세 사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고 자주독립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유발표

▣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 장희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장희연*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1960년의 6.0명에서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인구 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²⁾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강혜진, 2009: 1),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1년엔 1.24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심화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경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2011년부터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0-2015)인 「새로마지플랜 2015」를 시행하여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출산·양육비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과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들이 학계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출산은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민현주, 2007; 송영주 외, 2011; 장창곡·김응석, 1987), 문화적 요인(박수미, 2005; 신효영, 2009; 정영혜 외, 2013), 경제적 요인(민희철, 2008; 신윤정, 2008; 이선형, 2009; 이성림, 201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heeyoen2@nate.com

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써 연령별 출산율(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통계청, 2013).

2) 이론적으로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이 두 명의 자녀를 낳아 2명의 부부를 대체할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재생산기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1명을 출산해야만 한다. 즉,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것은 합계출산율이 2.1명일 경우를 말하며,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한다(이인숙, 2005: 68).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출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출산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권영인, 2013; 김미영, 2006; 배광일, 2011)이 시도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은 가정, 직장, 문화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개인과 환경체계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곽노의 외, 2010: 46)으로, 기혼여성의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포함하여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시켜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선행연구에서는 미시체계 변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자녀가치관이 출산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힌 연구(권영인, 2013; 배광일, 2011)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녀가치관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 만족감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담, 갈등 등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변인(마미정, 2007: 24)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을 자녀의 중요성, 정서적 지원, 노후보장 등의 측면에만 집중하여 다양한 개념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 즉, 기존 자녀에게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보여주는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자녀 가치관의 개념에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기혼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 요인으로 출산지원정책³⁾의 인지도, 필요성, 수혜경험 횟수 등(권영인, 2013; 김미영, 2006; 배광일, 2011)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출산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주효진 외, 2010: 213), 같은 출산지원정책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선호하는 정책이 달라 개인 별로 정책에 대한 검증이 상이할 수 있다(이소영, 2007: 88). 따라서 단순히 출산지원정책의 인지도나 필요성, 수혜경험 횟수 등을 거시체계로 분류되는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지표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 중 대상자들의 이해도가 높고 최근 정부의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대부분 행해지므로 계획이나 의

3)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새로마지 플랜」의 중점과제인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확대, 임신·출산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지원 등이 포함된다.

도되지 않는 출산까지 포함하는 완결 출산율보다 의도를 가진 출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출산의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이정원, 2007: 71). 또한, 출산율, 출산행동, 출산결정 등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라면, 출산의도는 현재를 통해 미래의 출산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지표로 제시되고 있다(김정석, 2007: 9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체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출산의도

출산의도는 향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의사(Richer et al., 1994) 혹은 자녀를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생각으로 정의 내려진다(배광일, 2011; 이정원, 2007). 그러나 출산의도라는 것이 실제로 아이를 낳은 출산결정 즉, 출산행위의 결과가 아닌 출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 의도 또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을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산의도와 출산결정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의도, 배우자와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영훈, 2014: 11). 실제 출산 행위로 이행되는 과정의 첫 단계인 출산의도를 가지는 시기부터 분석할 경우, 그 시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출산을 방해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출산율이나 자녀 수 뿐만 아니라 출산의도를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연구는 그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한윤옥, 2012: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타당성이 높고 중요한 주제로 활용되고 있는 출산의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출산의도 관련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출산계획’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출산의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존재한

4) Bernardi(2005: 124)는 출산의지와 실제 출산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Child Gap"으로 정의하였다. 스페인을 주 분석 국가로 선정하여 출산의도와 실제 출산행위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1995년 18-49세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의 평균은 2.2명인 반면, 실제로 관찰된 합계출산율은 1.2명에 불과하였다.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계획’ 과 더불어 ‘이상자녀수’⁶⁾를 추가하여 기혼여성의 출산 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 시키고, 개인과 환경체계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곽노의 외, 2010: 46). 또한, 생태학적 관점은 단순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교류를 살펴보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이인정·최해경, 2007: 453).

환경이나 맥락(context)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4가지의 체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환경은 미시 체계로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하는 즉각적인(immediate) 환경을 말한다. 미시체계는 대부분 가정에 초점을 두는데 (Bronfenbrenner, 1994: 39),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족 체계는 중요한 미시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소희 외, 2006: 81).

다음으로,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인간이 속한 둘이나 그 이상의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연결과 과정을 말한다. 즉, 미시체계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미시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미시체계 간의 연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이인정·최해경, 2007: 459).

외부체계는 개인이 실제로 당면하는 상황 및 환경은 아니지만 그 개인이 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에게 중요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직장은 자녀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Bronfenbrenner, 1993: 25).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특징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문화, 하위문화, 확대된 사회구조까지 포함한다(Bronfenbrenner, 1994: 40). 거시체계 가운데 브론펜브레너가 주목했던 것은 국가의 정책 및 제도로, 정책 및 제도가 인간의 생활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인정·최해경, 2007: 461).

이상에서 살펴본 생태학적 관점에 개인의 출산행위를 적용시켜보면, 현대사회가 보다 복잡해짐

5) 향후 자녀 출산의 가능성에 대한 의향 및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6) 실제로 낳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향후 몇 명의 자녀를 두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자녀수를 의미한다.

에 따라 개인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분석틀인 생태학적 관점은 기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 할 수 있다.

3. 차별 출산력 이론

차별 출산력 이론(differential fertility)이란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즉, 개인의 성별, 지역, 종교, 자녀 수 등과 같은 여러 기준에 의해 출산력에 차이가 나타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최은영·박영실, 2009: 177). 차별 출산력 이론에 따르면 출산은 전적으로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구·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강조한다(이소영, 2008: 18). 차별 출산력 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주어진 배경으로 인해 출산력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배경변인과 출산력의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 출산력 이론을 전제하여 인구·사회적인 특성상 실제 출산을 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출산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단을 독려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신나리, 2013: 2).

4. 탈물질적 가치이론

탈물질적 가치이론이란 전통적인 근대사회에서는 물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 등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선호했던 것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자기존엄, 자아실현 등과 같이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점차 탈물질적 가치로 이행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조영훈, 2000: 268).

현대사회의 기혼여성들은 과거 가부장적 사회제도 안에서 혼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탈물질적 가치관의 형성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태도 변화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다(마미정, 2007: 29).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자녀가치관의 약화는 산업화된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자녀의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부부중심의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약해지면서 출산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태현, 2005: 20).

자녀가치관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 만족감 등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담, 갈등 등 자녀양육에 대한 양면성, 즉 출산에 대한 동기유발요인이 됨과 동시에 출산기피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마미정, 2007: 24).

5. 양성평등이론

양성평등이론은 가족 내에서의 성 형평성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부부의 양육·가사분담 등이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이하나, 2014: 36).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남을 설명한다(김승권, 2005: 7).

McDonald(2000)의 연구에서는 공적제도와 가족제도 내에서의 성 평등 수준이 부조화를 이루게 될 때 출산력 감소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공적제도에서는 높은 성 평등 수준을, 가족제도 내에서는 낮은 성 평등 수준을 보이게 되어 출산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교육과 노동현장에서는 남녀가 평등한 조건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조건이 잔재하여 발생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전은화, 2013: 25). 결국, 가정 내에서의 가사분담 및 양육분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출산과 양육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김승권(2005: 7)은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는 증가하였지만, 가정 내에서 남성의 역할은 변화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와 자녀양육에 지출하는 시간량을 살펴보았더니 여성 197분, 남성 72분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수입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근 후 가사와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어 가정 내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라기보다는 성평등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치와 제도가 양성 평등함을 기반으로 변해갈 때 여성들은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이현옥, 2011: 23).

6. 소득관련이론

소득의 향상이 출산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도시화의 촉진 등이 기존의 대가족화에서 소가족화/소자녀관을 형성하게 만들어 인구의 증가를 억제시킨다고 보는 관점으로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으로 뒷받침된다(김

승권, 2003: 2). 다시 말해, 출산력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인구구조에서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어 인구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승권, 2003: 2). 이와는 다르게, 쿠즈네츠(Kuznets)는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는 유럽의 경우 근대경제발전의 초기단계의 과정에서 출산율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지만, 다음단계에서는 출산율이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다(이하나, 2014: 34).

7. 사회적 출산·육아 이론

사회적 출산·육아 이론은 개인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시몬(Simon, 1974)은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제도적인 측면이 개인의 규범과 기호 형성에 작용하여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김미영, 2006: 9). 이처럼 출산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행위이지만, 그 사회에 형성된 제도적 측면이 개인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관련 제도가 정립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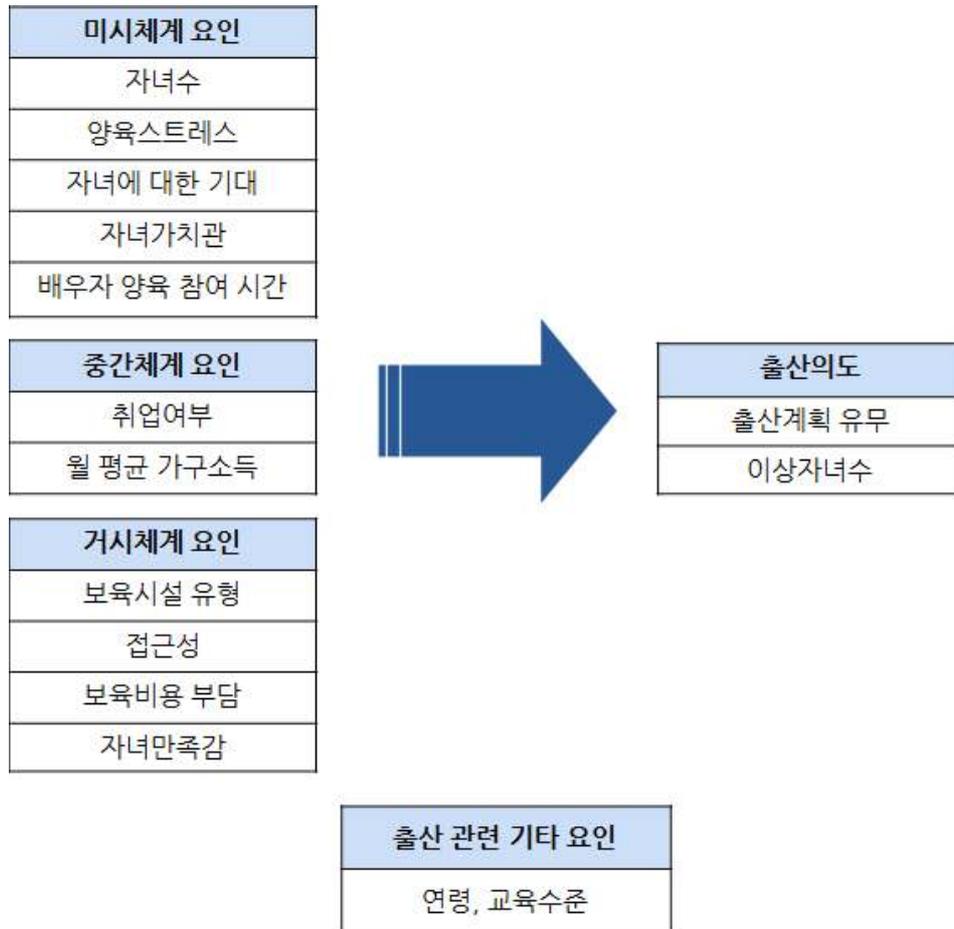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정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한 북유럽국가나 불어권 국가들은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인구고령화의 문제 또한 속도가 감소되거나 완화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방영이, 2010: 19). 이들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 중 특히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둔 것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며(Engelhardt and Prskawetz, 2004), 출산율 제고에 있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체계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생

태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인인 출산의도는 출산계획유무와 이상자녀수로 나눠 분석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인인 미시체계 요인으로는 자녀수, 양육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가치관,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을, 중간체계 요인으로는 취업여부, 월 평균 가구소득을, 거시체계 요인으로는 보육시설 유형, 접근성, 보육비용 부담, 자녀만족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최종

2,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이 만 12세가 될 때까지 양육과 성장·발달을 장기적으로 조사한 패널 데이터이다(김은설 외, 2012: 15).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2011년 4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차년도 자료는 아동이 만 3세가 되면서 이전 나이보다 더 많은 대상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더 많은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즉,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사용될 ‘자녀만족감’에 해당하는 문항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교사를 좋아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이정림 외, 2011: 40)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원 자료 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실제 출산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머니(70.6%)라는 선행연구(이정림 외, 2011)를 바탕으로 총 1,754가구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 748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최소 23세에서 최대 49세로 가임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들이 주 대상이었으며, 평균 33.87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231명(30.9%), 전문대 졸 209명(27.9%), 대졸 이상 308명(41.2%)으로 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1) 출산계획유무

출산계획유무에 대한 문항은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를 사용하였다. 항목은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자녀를 ‘낳겠음 1’, ‘낳지 않겠음 0’으로 측정하여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이상자녀수

이상자녀수에 대한 문항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몇 명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무자녀 0점에서 5명 이상’을 5점 점수로 하는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미시체계 요인

① 자녀수

자녀수는 연속 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11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죄책감,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872로 나타났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③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가 판단하기에 바람직한 발달적 특성 및 과정을 자녀가 미래에 성취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며 6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가지 문항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명성, 여유로운 생활 등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725로 나타났다. 각 항목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1)부터 매우 원한다(4)의 4점 척도이며, 각 항목을 합산한 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을 의미한다.

④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 기혼여성에게 자녀에 대한 생각 및 태도를 묻는 8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79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부모 됨의 가치성, 자녀의 필요성 및 중요성, 정서적 지원, 노후 지원 등이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 뒤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은 가정 내에서 부부의 양육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자녀 양육을 위해 보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성 평등성이 높음을 뜻한다.

(2) 중간체계 요인

① 취업여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현재 취업 및 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의 문항으로, '취업 중', '학업 중', '미취업/미학업' 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취업 중' 과 '학업 중' 을 합하여 '취업 1' 그리고 '미취업 0'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②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의 소득 문항은 '한국 교육고용패널' 의 자료에 기초하여(이정림 외, 2011: 177)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55)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도 이를 합산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거시체계 요인

① 보육시설 유형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국공립법인보육시설(1)', '민간보육시설(2)', '가정·부모협동보육시설(3)' 로 구성된 질적 척도이므로 더미 처리를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② 접근성

보육서비스 이용특성 중 접근성은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서부터 보육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육아지원기관 등·하원 소요 시간' 에 관한 2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923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접근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③ 보육비용 부담

보육비용 부담은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보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생활수준에 부담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항으로는 '현재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 이

7) 자녀의 출산은 취업 및 학업과 같은 기혼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주된 원인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는 대상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여부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정림 외, 2011: 22).

용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며, 각 항목으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부담된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보육비용 부담 지표는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부담됨을 의미한다.

④ 자녀만족감

자녀만족감이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인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게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측정한 2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55로 나타났다. 각 항목은 '전혀 좋아하지 않음' (1)에서 '아주 좋아함' (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은 합산한 뒤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자녀만족감 지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1) 연령

기혼여성의 연령은 연속변수 형태인 만 나이로 측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2) 교육수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 박사 졸'까지 총 8가지 항목으로, 이를 '고등학교 졸 이하(1)', '전문대 졸(2)', '대학교 졸 이상(3)'으로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생태학적 요인에 따라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출산의도를 출산계획유무와 이상자녀수로 나누어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생태학적 요인과 출산계획유무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생태학적 요인과 출산계획유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미시체계 요인과 출산계획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수는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1.25명,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은 1.77명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0.328, p<.001$).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에 따른 출산계획유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3.57시간,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09시간으로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의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494, p<.05$).

중간체계 요인과 출산계획유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762, p<.01$).

거시체계 요인인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과 출산계획유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자녀만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이 평균 3.89점,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이 4.03점으로 자녀만족감 점수가 높더라도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431, p<.05$).

〈표 1〉 생태체계 요인과 출산계획 유무의 차이

(N=748)

구분	출산계획유무		t / χ^2	
	남겠음 M(SD) / N(%)	남지 않겠음 M(SD) / N(%)		
미시체계 요인	자녀수	1.25(0.52)	1.77(0.71)	-10.328***
	양육스트레스	2.73(0.65)	2.83(0.64)	-1.715
	자녀에 대한 기대	3.15(0.43)	3.17(0.42)	-.549
	자녀가치관	3.65(0.59)	3.59(0.58)	1.123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	3.57(2.19)	3.09(2.02)	2.494*
중간체계 요인	월 평균 가구소득	409.64(229.74)	494.93(568.91)	-2.762**
	취업여부	취업	286(78.8)	0.390
		미취업	74(19.4)	
거시체계 요인	접근성	21.70(17.72)	20.23(20.97)	0.792
	보육비용 부담	3.09(1.09)	3.19(1.19)	-.992
	자녀만족감	3.89(0.65)	4.03(0.64)	-2.431*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법인	26(18.6)	114(81.4)	1.002
		민간	86(21.1)	321(78.9)	
		가정·부모협동	32(17.9)	147(82.1)	

* $p < .05$, ** $p < .01$, *** $p < .001$

2. 생태학적 요인과 이상자녀수의 차이

중간체계 요인 중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이상자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취업 집단이 2.54명, 미취업 집단이 2.48명으로 나타나 취업 집단의 이상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시체계 요인인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 중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이상자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국공립법인 집단의 이상자녀수는 2.60명, 민간 집단은 2.47명, 가정·부모협동 집단은 2.54명으로 국공립법인 집단이 민간 보다 약 0.13명, 가정·부모협동 보다 0.06명 이상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생태체계 요인과 이상자녀수의 차이

(N=748)

구분			N	M	SD	t / F
중간체계 요인	취업여부	취업	359	2.54	0.75	0.977
		미취업	378	2.48	0.74	
거시체계 요인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법인	137	2.60	0.78	1.585
		민간	402	2.47	0.72	
		가정·부모협동	179	2.54	0.76	

* $p < .05$, ** $p < .01$, *** $p < .001$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먼저 출산의도의 한 변인인 이상자녀수와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시체계 요인인 자녀수($r=.239$, $p < .001$), 자녀가치관($r=.111$, $p < .01$)이 이상자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혼여성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다중공선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가 최대 .395였으며, 공차한계는 모든 변수에서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은 모두 1.4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1) 생태학적 요인이 출산계획유무에 미치는 영향

출산계획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 I에서는 생태학적 요인인 미시체계 요인을 투입하였고, 모형II에서는 중간체계 요인, 모형III에서는 거시체계 요인, 마지막으로 모형IV에서는 모든 생태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모형 I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한 후 미시체계 요인이 출산계획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형 I의 설명력은 17.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미시체계 요인 중 자녀수가 출산계획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녀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7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 = .227$, $p < .001$).

다음으로, 모형II에서는 출산 관련 기타 요인을 통제한 후 중간체계 요인인 취업여부와 월 평균 가구소득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II의 설명력은 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체계 요인은 출산계획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인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을 투입한 모형III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시체계 요인인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은 출산계획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IV에서는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태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력이 발견되는 체계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모형IV의 설명력은 18.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출산계획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제변인인 기혼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미시체계 요인인 자녀수와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1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 = .879$, $p < .001$).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인 경우가 대졸이상에 비해 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9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ext{Exp}(B) = 1.910$, $p < .05$), 또한 전문대졸일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13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2.326$, $p<.01$). 즉,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기혼여성이 출산을 계획할 때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중 미시체계 요인인 자녀 수와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녀의 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72.7% 감소하였고($\text{Exp}(B)=.273$, $p<.001$),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은 1시간 증가할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14.1% 높게 나타났다($\text{Exp}(B)=1.141$, $p<.05$).

☞ 다음 페이지에 <표 3> 참조

〈표 3〉 생태학적 요인이 출산계획유무에 미치는 영향

(N= 748)

	구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B(S,E)	Walls	Exp(B)	B(S,E)	Walls	Exp(B)	B(S,E)	Walls	Exp(B)	B(S,E)	Walls	Exp(B)	
출산 관련 기타 요인	연령	-.112(.033)	11,763 ***	.894	-.202(.032)	39,357 ***	.817	-.210(.034)	38,957 ***	.811	-.129(.038)	11,327 ***	.879	
	교육수준 (대졸이상)	고졸이하	.443(.264)	2,816	1,557	.113(.253)	.199	1,120	.062(.266)	.055	1,064	.647(.299)	4,686 *	1,910
		전문대졸	.764(.257)	8,825 **	2,147	.518(.243)	4,547 *	1,678	.347(.258)	1,808	1,414	.844(.291)	8,408 **	2,326
미시 체계 요인	자녀수	-1,484(.213)	48,729 ***	.227							-1,300(.235)	30,553 ***	.273	
	양육스트레스	-.196(.177)	1,229	.822							-.225(.200)	1,274	.798	
	자녀에 대한 기대	-.085(.248)	.117	.919							-.156(.272)	.329	.855	
	자녀가치관	.225(.194)	1,347	1,252							.201(.216)	.868	1,223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	.077(.049)	2,439	1,080							.132(.058)	5,185 *	1,141	
중간 체계 요인	취업여부				.222(.205)	1,171	1,249				.372(.240)	2,407	1,451	
	월 평균 가구소득				-.062(.132)	.222	.940				.075(.150)	.246	1,077	
거시 체계 요인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법 인)	민간						.342(.299)	1,312	1,408	.383(.329)	1,360	1,467	
		가정· 부모협동						.472(.340)	1,919	1,602	.413(.373)	1,227	1,512	
	접근성							.010(.007)	2,026	1,010	.004(.007)	.337	1,004	
	보육비용 부담							-.071(.092)	.601	.931	-.083(.102)	.665	.920	
	자녀 만족감							-.247(.160)	2,376	.781	-.295(.177)	2,768	.744	
상수		4,022(1,662)	5,860 *	55,822	5,511(1,289)	18,284 ***	247,417	6,288(1,330)	22,372 ***	538,322	4,872(2,067)	5,558 *	130,638	
Model χ^2 (df)		125,341(8) ***			58,800(5) ***			61,521(8) ***			111,231(15) ***			
-2log likelihood		577.646			620.666			559.738			475.867			
Cox와 Snell의 R ²		.170			.087			.099			.183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생태학적 요인이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출산계획유무의 분석과 동일하게 생태학적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 I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한 후 미시체계 요인이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I의 설명력은 7.9%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요인으로는 자녀수와 자녀가치관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수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약 0.2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b=.252, p<.001$), 자녀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점수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약 0.1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b=.151, p<.01$).

다음으로, 모형 II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한 후 중간체계 요인인 취업여부와 월 평균 가구소득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모형 II의 설명력은 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중간체계 요인은 기혼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에서는 출산 관련 기타 요인을 통제한 후 거시체계 요인인 보육서비스 이용 특성을 투입하여 이상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 III의 설명력은 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거시체계 요인은 이상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태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 IV의 설명력은 7.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시체계 요인인 자녀수와 자녀가치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약 0.2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b=.230, p<.001$),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자녀수가 약 0.13명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b=.132, p<.05$).

☞ 다음 페이지에 <표 4> 참조

〈표 4〉 생태학적 요인이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N= 748)

	구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B(S,E)	Beta	t	B(S,E)	Beta	t	B(S,E)	Beta	t	B(S,E)	Beta	t	
출산 관련 기타 요인	연령	-.002(.008)	-.012	-.305	.018(.008)	.090	2.311*	.016(.007)	.083	2.249*	-.032(.312)	-.005	-.103	
	교육수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116(.070)	-.071	-1.656	-.125(.074)	-.075	-1.684	-.111(.070)	-.067	-1.570	-.132(.079)	-.081	-1.678
		대졸이상	-.140(.065)	-.093	-2.152*	-.199(.068)	-.132	-2.910**	-.187(.064)	-.125	-2.900**	-.117(.075)	-.077	-1.558
미시 체계 요인	자녀수	.252(.043)	.239	5.927***							.230(.050)	.216	4.621***	
	양육스트레스	.052(.045)	.045	1.158							.043(.052)	.037	.827	
	자녀에 대한 기대	-.086(.065)	-.049	-1.322							-.052(.072)	-.030	-.727	
	자녀가치관	.151(.050)	.118	3.023**							.132(.056)	.104	2.343*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	-.003(.013)	-.009	-.252							-.013(.016)	-.034	-.800	
중간 체계 요인	취업여부				.079(.058)	.053	1.358				.088(.063)	.060	1.409	
	월 평균 가구소득				-.009(.041)	-.009	-.230				-.022(.042)	-.023	-.526	
거시 체계 요인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법 인)	민간									-.110(.072)	-.073	-1.519	
		가정· 부모협동									-.037(.083)	-.021	-.447	
	접근성										.001(.001)	.021	.564	
	보육비용 부담										-.004(.025)	-.006	-.163	
	자녀 만족감										.105(.159)	.024	.662	
상수		1,858(.417)		4.452***	2,035(.328)		6,204***	1,987(.336)		5,923***	2,272(1,169)		1,943*	
F			7.631***			3.010*			2.117*			3.105***		
R ²			.079			.022			.022			.076		
R ² change			.069			.015			.012			.051		

* p<.05, ** p<.01,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해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포괄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나누어 세 가지 체계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체계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시체계 요인인 자녀수와 배우자의 양육 참여 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이 무엇인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시체계 요인인 자녀수와 자녀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던 기존 자녀에게 느끼는 심리적 요인들 중 자녀가치관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자녀의 필요성 및 만족, 기대 등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가치관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 소자녀관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무자녀관을 가진 사회구성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에 있어 자녀가치관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치관의 경우, 초기에는 개인이 속한 미시체계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그 사회가 지닌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녀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수는 기혼여성의 출산계획과 더불어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을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 다자녀보다 부부중심의 무자녀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자녀를 기피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자녀가정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보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 양육 참여 시간은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계획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에서 역할분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우리사회의 성평등 의식의 고취와 함께 부부

간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아버지들의 출산 및 양육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제(daddy's quota)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원하는 아버지 할당제가 정착되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의 인식 전환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아버지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마련하였다.

첫째, 출산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녀수' 변인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녀의 출생순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따른 분석과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계획유무와 이상자녀수는 출산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대리 변인으로 유용하지만, 출산의도와 출산결정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출산계획유무와 이상자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변인으로 '기대자녀수'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출생한 자녀수에 더해 향후 출산계획을 하고 있는 자녀수를 합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좀 더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혜진. 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노의 외. 2010. **영유아 발달**. 양서원.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검색일: 2014.11.25. 20:00)
- 권영인. 2013. “출산장려정책 및 경제 상황 인식과 가족 가치관이 미혼 남녀의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
- 김미영. 2006.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2003.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
- 김승권. 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 김은설 외. 2012. **한국이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
- 김태현. 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 마미정. 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현주. 2007. “엄마의 취업과 자녀태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41.
-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1.
- 박수미. 2005. “가족내 성평등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 방영이. 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광일. 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영주 외. 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 유아교육연구**, 16.
- 산나리. 2013.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2.
- 신영훈. 2014.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미취학 자녀 양육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형. 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
- 이성림. 2010. “자녀 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의도,” **대한가정학회지**, 48.
- 이소영. 2007.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8.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 이소희 외. 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현사.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
- 이인정·최해경. 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 합리적-가치적 선택적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림 외. 2011. **한국이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하나. 2014. “비공식적 돌봄 자원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 2011. “한국여성의 출산행태 결정요인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창곡·김응석. 1987.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수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논집**, 6.
- 전은화. 2013. “직장기혼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혜 외. 2013.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지**, 20.
- 조영훈. 2000. “탈산업화시대의 복지국가 : 탈물질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의 복지국가 쇠퇴론 평가,” **현상과 인식**, 24.
- 주효진 외. 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
- 최은영·박영실. 2009.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9차년도 사용자 지침서**.
- 한윤옥. 2012.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rnardi, Fabrizio. 2005. “Public policies and low fertility: rationales for public intervention and a diagnosis for the Spanish cas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
- Bronfenbrenner, Urie.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3.
- Engelhardt, Henriette and Prskawetz, Alexia. 2004. “On the changing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over space and tim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 Richer, Kerry, et al.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에 대한 토론

박보영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한 요인 중의 하나인 출산을 저하에 주목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일 뿐 아니라 정책적 제언이 가능한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술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토론자는 이 논문의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저자는 종속변수로 ‘출산계획’ 과 ‘이상자녀수’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음. 통상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에선 종속변수를 하나만 설정하는 것이 상례임.
 - 토론자가 보기에 종속변수를 두 개로 설정할 경우 논문의 설명력이 약해지고 초점 또한 흐려질 것으로 우려됨.
 - 설령 저자의 연구설계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상자녀수’ 가 어떤 점에서 출산의도를 대표하는 지표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보임. 즉 종속변수 설정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임.
 - 더불어 ‘이상자녀수’ 라는 변수는 ‘출산의도’ 를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많은 변수로 보여짐.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와 ‘실제 출산 의향(또는 의지)’ 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저자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속변수를 사용하면서 각

각의 (종속)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음.

- 이를테면 ‘출산계획 유무’ 변수를 다룰 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이상자녀 수’ 변수를 다룰 때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있음. 이럴 경우 이 분석이 (유의미한 분석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 통계적으로 타당성 있는 분석인지 아닌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저자의 이런 분석방법은 유의미한 변수를 어떻게든 찾아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여짐.
- 추가로,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 ‘이상자녀수 0명’ 을 ‘0’ 으로, 그 이상의 자녀수를 ‘1’ 로 리코딩을 할 것을 권함. 즉 더미(dummy) 변수 처리를 한 다음, 이것을 ‘출산계획 유무’ 변수와 연결시켜 분석하는 것이 나아보임. (* 출산계획 유무의 경우, 저자는 이미 더미 변수 처리를 하고 있음.)

○ 저자는 독립변수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범주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범주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부족해 보임.

- 이론적 배경에서 ‘생태학적 관점’ 을 제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체계에 속한 변수들이 왜 그 체계에 속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함. 즉 각 체계별로 (저자가 설정한) 변수들이 왜 그 체계에 속하게 되었는지 저자 나름대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언하자면, 이론적 배경에서 관련 변수들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충분히 제시해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중간체계’ 라는 용어보다는 ‘중범위 체계’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으로 더 보편적이라고 사료됨.

○ 논문이 추리통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통계표들이 순차적·논리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최종결과표(p.67, <표 4>)를 기준으로 보면, <표 2>에서 왜 미시체계 요인(변인)이 빠졌는지 모르겠음. 이에 대해 저자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누락된 미시체계 요인을 <표 2>에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1단계 통계표에서는 (저자가 동원하는) 독립변수가 유의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인 2단계 표에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그리고 마지막(3단계) 표에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 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의 강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논문이 이와 같이 순차적·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기술통계가 아닌) 추리통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음.

- 저자는 결론(p.68)에서 ‘자녀(가치)관’ 이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음.
 - 저자가 얘기하는 ‘자녀(가치)관’ 이 개념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필요가 있음. 결론 부분만 봐서는 다소 모호하게 언급만 되어 있음.
 - 참고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제언은 자칫 개발연대기의 국가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여짐.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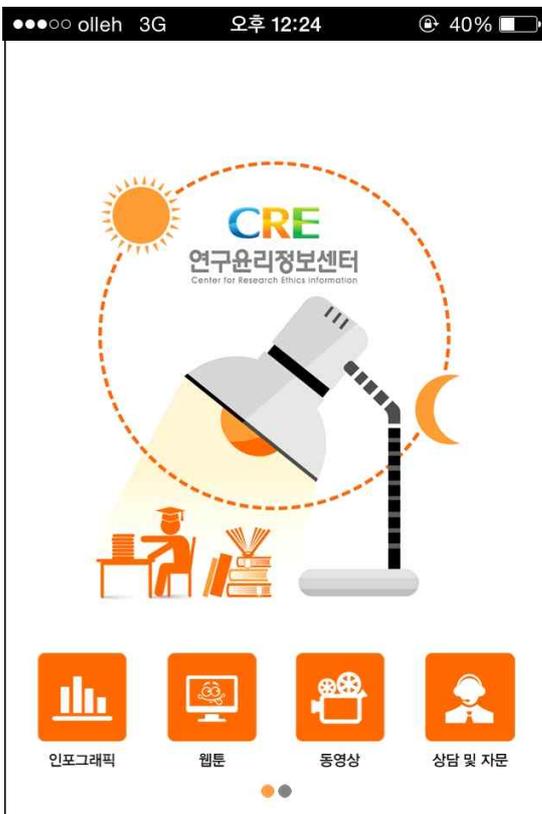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2016.04.23)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2016.04.23)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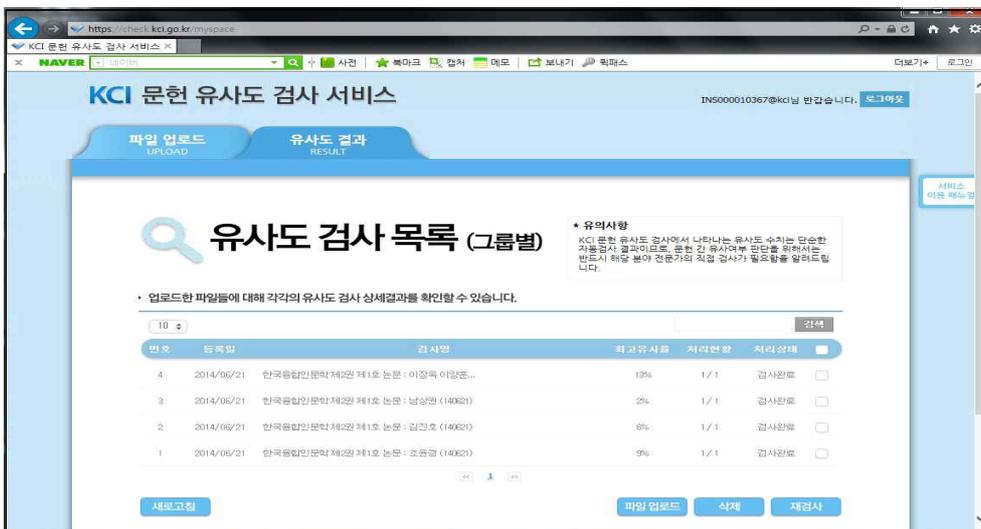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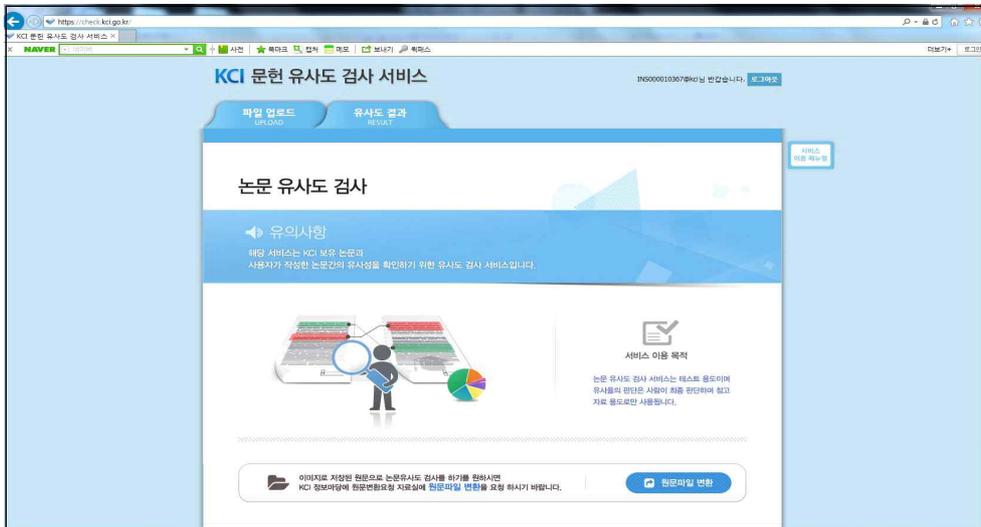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10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14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19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30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35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38
4. 제보자와 피조사자	42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제보접수	49
2. 예비조사	52
3. 본조사	61
4. 판정	75
5. 이의신청	76
6. 검증 시 유의사항	78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에 보고	84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86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90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2016.04.23)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2016.04.23)

지식, 지식인 그리고 공적 가치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